생협 연대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 정책

이슈 기획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지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해부한다

조합원 활동가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2011 봄
2호

생활 교육

2011 봄
2호

생협평론 2011 봄 (2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김아영 이선옥 이성선 정설경
편집위원장	염찬희
편집디자인	이경원 (스튜디오 보싸)
펴낸날	2011년 3월 21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전 화	02) 2060-1373 / 4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협평론 2011 봄 (2호)

길잡이
먹을거리만 다루라고요?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영근 (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 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7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 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허헌중 (지역재단 기획이사) 28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신성식 (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37

좌담회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49

이슈 기획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분숙 (르뽀작가) 66

복지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해부한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75

조합원 활동가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원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87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97

돌발논문
SSM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친서민 대 친대기업으로 양분되는 보도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98

서평
『식품주식회사』 엄은희 (부산대학교 HK교수) 106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109

먹을거리만 다루라고요?

염찬희 (편집위원장)

2010년 12월 20일, <생협평론>이 창간되었습니다.
창간호의 표지 색깔이 일부 독자들께는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원래 기획한 의도는 자연드림의 색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인쇄 과정에서 빨간색이 과하게(?) 섞였습니다. 자연드림 로고와 똑같은 색을 정확하게 만들려면 제작 단가가 심하게 올라가는 숨은 사정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속사정을 거쳐 나온 것이 창간호의 표지색입니다. 일부 독자 분들은 너무 빨갛다고 우려했지만, 또 다른 독자들은 예쁘다고 환호해주셨습니다.
사실 창간호의 표지색을 색깔론으로 읽어내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붉은색과 천안함 보도 원고가 결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것이 일부 조합원 독자들의 정서를 불편하게 건드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보도를 다룬 '돌발논문' 꼭지는 윤리적 소비의 미디어 부분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또한 우리가 윤리적으로 소비해야할 대상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 원고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한 글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언론의 임무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는 대개 국가 권력(정부), 경제 권력(대자본)들을 감시하는 중에 나옵니다. 국가나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를 탐사하고 분석할 때 언론은 존재의 이유를 확보합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다! 천안함에 대한 보도를 봐도 그렇다. 이것이 그 원고의 논지였습니다.

제가 일부 독자의 항의를 '색깔론'이라 표현한 이유는, "생협이 왜 사상교육을 하느냐"는 불만의 실체를 확인해보니, "어떤 대목이 특정 이념을 강요하고 있다"는 식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4대강'이나 '천안함'을 "왜" 다루느냐며 소재 자체를 문제 삼은 비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색깔에 대한 불편한 속내는 생협이 먹을거리만 이야기해야지 웬 정치 이야기냐고 비난

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먹을거리는 정치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먹을거리는 그것만 진공상태 속에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좋은 먹을거리를 만들고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소비자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잘 먹어야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힘의 관계로 인해 어떤 경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 정책들이 좋은 먹을거리를 만들고 유통시키고 소비하는데 장애가 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창간호가 불편한 독자 분들이 있다면, 보고 싶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제목이 아니라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비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2호를 엮어 내놓습니다. 2호는 농업 생산의 문제가 소비자와 별개인가? 소비자가 생산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특집으로 기획했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인 아이쿱이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도록 틀을 짜놓고는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는 주위의 불만 섞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한 모든 생협 조직의 조합원과 생산자들에게 생산과 소비의 회로를 원활하게 하여 모두 함께 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윤리적 소비와 생산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는 권고의 기획이기도 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소비하는 농축수산물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생산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서 소비하자는 윤리적 소비 운동이야말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사업체이면서 운동체인 생협 조직이 목표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협평론>의 정체성은 협동・나눔・평화라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지향을 현실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교류하는 공론장입니다.
<생협평론>은 협동・나눔・평화의 문제를 논구하되 이를 아름답게 추상화시켜 하늘로 올려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현실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구체적으로 논쟁하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생협 연구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 정책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영근 (생명창고 · 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Ⅰ. 한국농업의 현주소 : WTO · FTA에 의한 피폭,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GMO에 의한 생태계와 환경, 농경지의 피폭

1. '가축들의 공동묘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WTO-FTA 시대는 질병의 세계화 · 폐기물 처리의 세계화 시스템이다. 그 세계화에 의해 강토와 삼라만상이 죽음 앞에서 몸부림 치고 있다. '흙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땅(흙)은 살아 있는 생명체다.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라는 후기의 '오행상생설(五行 相生說)'은 하나의 원소가 다음의 원소를 낳는다는 뜻이다. 木은 연소되어 火를 만들고, 火는 재(灰)를 만들어서 土로 되고, 土에서 금속이 만들어지고, 금속의 속에서 水가 만들어 지고, 水는 木을 육성해 상생 · 순환한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소중하게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이 목화토금수이다. 목화토금수의 순환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으면, 화석 에너지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문제로 대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 생태계와 환경이 오염된다. 목화토금수의 중간에 배치된 흙(土)은 오행의 순환을 성립시키는 중심 역할을 한다. 따라서 땅(흙)의 죽음은 자연 순환을 파괴해 나머지 4행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다.

구제역이라는 피폭으로 3,633개 농장의 소 14만 9423마리, 1,590개 농장의 돼지 294만 9899마리, 200개 농장의 염소 5,343마리, 133개 농장의 사슴 2,806마리 등 총 5,556개 농장의 310만 7,471마리가 '예방적 살 처분'되었다. 전국에 만들어진 거대한 가축들의 공동묘지는 흙의 죽음을 초래해 반(反) 생명의 순환 고리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해 쇠고기 수출액은 미화 37만 달러(약 4억원)이고, 돼지고기 수출액은 159만 달러(약 18억원)정도였다. 축산물 수출로 22억원을 벌기 위해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하려고 늑장 대응하다, 오히려 1조 7008억원(2011년 2월 8일 기준 피해액)을 쏟아 붓게 되었다. 앞으로도 피해액과 뒤처리를 위한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2. GMO에 의해 생태계와 환경, 농경지가 피폭되었다

1) 2010년 11월 30일, 인터넷 뉴스 쿠키(국민일보)가 국립환경과학원의 보도자료(11월 30일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 228곳에서 GMO의 환경 유출을 조사한 후 단백질 면역분석을 통해 GMO 여부를 추정한 결과, 26곳에서 GMO 유출이 확인되었다. ② 26곳은 사료공장 9곳, 운송로 주변 14곳, 사료공장과 운송로 주변의 텃밭이 각 1곳, 축사 주변 1곳으로 밝혀졌다. ③ 15곳은 알곡이었고, 11곳은 작물이었다. ④ 작물별로는 인천에서는 GMO 유채가, 논산에서는 GMO 면화가, 김제・원주・횡성・나주・경주・함안은 GMO 옥수수가 발견되었고, ⑤ 지역으로는 원주・횡성이 11곳, 천안이 2곳, 나머지는 각각 1곳에서 발견되었다.

2) '바이오 안전성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대한 책임과 구제에 관한 나고야 쿠알라룸푸르 보완 의정서'(나고야 보완 의정서) 채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0년 10월 16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5차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 총회(MOP 5)에서,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이하, 나고야 보완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피해에 대한 책임과 구제 내용을 보완한 의정서 채택은, 주요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GMO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한국과 같은 GMO 수입국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보완 의정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GMO가 생태계나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 수입국은 원인 사업자를 특정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인 사업자는, GMO 보유자, 개발자, 생산자, 수출입업자, 수송자 등을 포함한다.
③ GMO 등에서 만들어진 '가공물'도 손해와의 인과 관계가 증명되면 적용된다.
④ 원인 사업자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대신 집행한다.
⑤ 정부는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기금창설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Ⅱ.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은 녹색파멸(Green Revocation)을 초래했다

1. 녹색 혁명형 농업의 본질과 폐해

'녹색혁명'이란 다수확 품종(HYVs)과 비료・농약・제초제 등 농화학 자재를 사용하고,

물 관리 기술을 조화시켜 증산(增産)을 목적으로 한 패키지 기술이다. 즉 비료, 농약, 제초제와 물 관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반응 품종(HRV) 개발을 통해 다수확을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화학 농자재를 고투입하는 증산기술을 토대로 한 '녹색혁명형 농업'은, 농가부채를 증가시켜 결국 농민은 이농하여 도시빈민이나 빈곤한 노동자로 전락했다. 녹색혁명형 농업은 도시와 공업에 편향적인 수입대체,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에 부합하는 농업 · 농민수탈 전략이다. 녹색혁명형 농업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첫째, 녹색혁명형 농업은 석유 의존형 농업으로 '원격지 간 물질순환 체계'를 형성하여 '지역 내 물질순환 체계'를 파괴했다는 점이다. 녹색혁명에 의해 확립된 원격지 간 물질순환 체계는 이른바 세계화라 불리는 WTO-FTA체제 출범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자유무역이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원격지에서 수입한 석유나 화학자재 및 사료 등을 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을 수입 · 제조 · 소비 · 폐기함으로써, 수입국 농촌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었다. 이는 수입국의 농촌 생태계를 교란 · 파괴하여 안전한 식료공급 기지로서 농촌지역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비료, 농약, 제초제, 동물약품 등 석유를 원료로 한 화학 농자재를 대량으로 투입하는 중화학 농업인 녹색혁명형 농업은, 투입 자재 대비 수확량 비율이 감소하면서 농가부채가 만성화되는 구조를 초래했다. 또한 환금성 높은 소수의 다수확 품종에 의존하는 농업 생산체계로 인해 재배작물의 종류가 감소하고, 주요 작물은 다수확 품종에 밀려 재래품종이 추방되었다. 이는 유전자원 혹은 유전질이 상실되는 위기를 불러와 작물의 진화 가능성과 생물 다양성을 축소시켜왔다. 이는 식료자원의 해외 의존과 농산물 수입 의존으로 이어져 먹을거리의 안전과 안심성이 위협받고 있다. 재배 집단이 균질화 되면서 농업생산기반은 취약해졌고, 빈번한 병충해로 과다한 화학자재 투입을 초래해 환경과 생태계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녹색혁명형 농업으로 지역의 특수성, 역사성, 전통성, 고유한 장점, 생태적 다양성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농업정책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녹색혁명은 다국적 기업이 제공하는 투입재와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정책에 의해 뒷받침 되었으나, WTO체제 이후 보조금 지원정책이 폐지되었고, 다국적 기업의 투입재는 가격이 올라 농가경제를 더욱 피폐시켰다. 정부는 녹색혁명의 단기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중앙집권적 농업정책을 개발 · 확산시키면서 이러한 농업정책이 마치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인 양 호도하였다.
녹색혁명형 농업은 농촌을 개발하려는 자연 정복형 환경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을 초래했다. ① 종자 종속, 금융 종속, 식량 의존도의 상승과 식량 종속, 에너지 종속, 유전자 자원 종속 등 5가지 종속. ② 농촌지역 내 계층 간 격차, 농촌지역들 간의 격차, 도 · 농간 격차, 농 · 공 간 격차 등 4가지 격차로 소농 축출과 이농 현상. ③ 생태계 · 환경 파괴, 소농 파괴, 농민의 가족 파괴, 지역사회의 생산 및 생활의 근거지 파괴, 농민들의 생존 및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근거지' 파괴. ④ 에너지, 투입 농자재와 원료의 원격지 조달, 농산물의 원격지 간 대량 유통, 지역 내 물질순환 구조 파괴. ⑤ WTO-FTA 체제 확립으로, 내분비 교란화학물질(EDCs, 환경호르몬), 유전자 조작 생명체(GMO), 각종 수입 폐기물 처리의 자유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H5N1), 브루셀라, 0-157, 사스, 광우병 등 다양한 질병의 세계화. ⑥ 석유 의존형 고투입 · 고비용형 농업 시스템 확립으로 농가 부채 구조화, 소농들의 축출, 이농으로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존립 가능성 위협.

넷째, 녹색혁명형 농업은 '근원적 독점'(Radical Monopoly)이다. 근원적 독점은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종속을 초래한다. 이는 구조적 폭력이다. 녹색혁명형 농업은 소농들의 근거지 파괴→근거지 축출→근거지 소멸을, 농촌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의 '합법적 행위'로 수행되었다. 결과는 만성 부채와 빈곤, 급격한 이농, 폐교, 의료시설 부족, 농민들의 만성적 실업, 건강과 환경 문제, 노인들의 영양실조, 물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자재 판매기업과 농산물 가공 · 유통기업, 생명특허를 가지고 있는 몬산토, 신젠타 등 종자 다국적 기업과 토건기업 등 기업의 이윤 추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구조적 폭력에 맞서 농촌현실을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농민들의 근거지 사수 투쟁은 불법으로 탄압받는 게 농촌민주화 운동의 현실이다.

다섯째, 한국 정부는 녹색혁명형 농업의 성공을 위해 진흥청,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등을 설립, 강화하는 데 집중 지원했다. 또한 농민들의 자발적 자치조직인 협동조합도 정부의 감시와 통제 아래 중앙집권적 종합 농협으로서 정부의 앞잡이(Agent)조직[1] 으로 변질되었다.
녹색혁명형 농업의 성공이 식량자급률을 하락시키고,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농수산

1 한국가톨릭농민회와 김태일은 '끄나풀' 조직이라 하였다.(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0 ; 김태일, 1991, 236쪽)

물유통공사가 설립되고, 수입사료 의존적인 축산업 · 수산업 정책은 음식료품 가공 산업을 육성했다. 일련의 일들은 입체적으로 농촌 지역 근거지를 파괴하여 농민들이 축출된 지금의 한국 농업 · 농촌이 된 것이다.

결국 녹색혁명형 농업은 '농업생산의 기본법칙'과 '공업생산의 기본법칙' 간에 존재하는 상호대립의 본질을 망각한 채 추진된 '농업 · 농촌의 공업화' 전략이다. '공업식 생산, 공장형 생산'은 자본의 논리를 추구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녹색혁명형 농업은 대규모 주산단지화, 대규모 도매시장 유통, 기계화, 중 · 화학 농자재를 통한 효율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생산도 '농지'에 제약받지 않는 농업생산을 추구하여 화학농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농산물 가공식품도 농민 없는 공업생산으로 인조식품, 나아가 GMO를 출현시켰다. 급기야 농민의 영혼마저 황폐화되었고, 시장과 국가의 복합 시스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초래되었다.

녹색혁명형 농업으로 주곡 자급은 달성되었으나, 식량자급률은 하락하였다. 양곡 자급률은 1970년 80.4%에서 1980년 56%, 1990년 43.1%, 1995년은 29.1%, 최근에는 26% 정도로 줄었다. 생산량은 늘었으나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는 1982년 93.0%에서 1985년은 78.9%로, 1991년은 74.7%로 낮아져서, 농사로는 가계비도 충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가 가구 수도 1975년에는 237만 9천 호에서, 1980년에는 215만 5천 호, 1985년에는 192만 6천 호, 1989년은 172만 2천 호로 급감하였고, 농가인구도 1975년 1,324만 4천 명에서 1980년은 1,082만 7천 명, 1985년은 852만 1천 명, 1989년은 678만 6천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녹색혁명형 농업에 따른 농촌의 주요 지표 변화> [2]

양곡자급률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최근
	80.4%	56%	43.1%	29.1%	26%
농가 가구 수	1975년	1980년	1985년	1985년	
	237만 9천호	215만 5천호	192만 6천호	172만 2천호	
농가 인구	1975년	1980년	1985년	1989년	
	1,324만 4천명	1,082만 7천명	852만 1천명	678만 6천명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1982년	1985년	1991년		
	93%	78.9%	74.7%		

2 필자 글을 바탕으로 편집 과정에서 구성한 표임(편집자 주)

녹색혁명형 농업 정책은 경제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확산되었다. (권연근,『지역순환형 사회를 꿈꾸며』,흙내,2009)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농업의 전개 과정은 녹색혁명형 농업의 강제적 확산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농업의 축소・쇠퇴와 농촌의 개발・파괴 및 농민의 축출・이농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평화스러운 모습을 띤 '구조적 폭력'이었다.[3]

녹색혁명형 농업은 분리・단절・차단의 농업이다. 생태계의 유기적인 순환과정, 1차 산업들 간의 순환, 농축수산물과 식품 간의 순환, 환경과 산업, 인간 간의 순환을 모두 분리・단절・차단시켰다. 이 과정은 자본과 공업의 논리로 추진되어 협동의 생산 대신 경쟁 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공평한 순환관계(Fair Relationship)는 녹색혁명형 농업이 아닌 '공평한 순환관계'의 복원을 통해 협동의 생산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Ⅲ. 현대 축산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유기・순환 축산 발전의 문제

1. 현대 축산은 '순환형 농업', '순환형 사회' 형성에 역행한다.

사료곡물의 수입에 의존하는 현대축산은 분뇨처리 문제 하나에도 높은 투자가 필요하다. 사료의 다 투입으로 가축개체의 생산 능력이 향상되어 국민에게 윤택한 축산물 공급은 가능해졌지만, 귀중한 자연환경을 오염・파괴하고, 생산자는 높은 경비와 부채의 증가로 수익성악화와 과중노동에 시달린다. 착유량 증대를 추구해 온 낙농도 축사 사육과 농후사료 다투입 결과, 소의 착유 년 수가 단축되어 젖소의 감가상각비용이 높아졌다. 양돈・양계와 같은 소가축 부문도 대규모화되어, 축사는 Animal Factory가 되었고 가축은 Animal Machine이 되었다. 수입 사료라는 '원료'를 투입하면, 콘베어 벨트에서 육류나 계란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공장형 축산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사 전체로 확산되고 생산자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된다. 가축의 생리나 행동원리를 무시하고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가축 관리를 종

3 Johan Galtung,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No. 3 (1969).

속시킨 결과,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간의 식료와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공장형 축산은 소자본 농민은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축산은 '순환형 농업',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역행하고 있다.
구제역 매몰 사태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가축의 생리적 본능을 인간이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현대축산의 기술이다. 동물복지란 가축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습성을 회복하고, 생태 · 환경과 유기적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폭력적으로 획일화 시키고 다양성을 제거한 현대축산에서, 공업의 논리를 거부하고 가축 본래의 모습으로 공평한 순환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2. 자연 순환형 축산 : 토착 기술과 지역자원을 이용한 농민적 축산과 생태 · 환경보전

첫째, 자연순환형 축산 기술은 농민의 영농과 생활의 근거지인 지역의 자원과 관행 속에서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보급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지역자원의 유효한 이용, 낮은 코스트, 생력화, 주변 환경 보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地緣技術'로, 토착지식과 지역에 토대를 둔 지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둘째, 자연순환형 축산 기술에는 가족경영이 쉽게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 방목이 권장되는 것은 초식동물의 생리와 행동을 활성화 하고, 축사 사육보다 경비가 절약되며, 농민에게 시간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의 축산농가에게는 노동 대체적이며, 비이용 농림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방목도입에 소규모 가족경영이 유지되는 것은 지역사회 붕괴를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

셋째, 자연순환형 축산은 지역의 축산을 진흥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 · 환경보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EU처럼 이에 대한 직접지불 같은 재정 지원이 당연히 행해져야 한다. 현재 직불제 대상은 1ha 이상 '농용지'를 갖고, 그곳에서 '농업생산활동 등'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지불 단가도 논, 밭, 채초 방목지에 따라 크게 다른데 방목지는 특히 불리하다. 경작이 방기된 중, 산간지역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논의에서 특히 자연순환형 축산과 적극 연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EU는 방목지에 대해 조건불리지역(LFAs)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넷째, 논은 동북아의 풍토에 합당한 농업생산 장치로서 중요하지만 꼭 벼농사에 한정된

건 아니다. 특히 답리작이 가능한 지역은 보리와 더불어 사료작물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앞갈이 작물(表作)로 사료전용 벼를 재배해 발효 조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조사료 자급전략으로 크게 권장되어야 한다. 수입 조사료와 경쟁조건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 일본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연순환형 축산은 대체로 소규모 농가에게 적합한 농업이기 때문에 소량 생산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유통기구는 대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순환형 축산의 생산물은 제품 차별화 또는 제품 구별화를 토대로 한 地産地消 · 旬産旬消, 또는 먹을거리 유통거리 줄이기(Food Miles), 지역 내 순환 개념을 도입한 유통체계의 구축과 홍보가 필요하다.

Ⅳ. 생명창고 · 지역 순환형 농업을 향하여

1. Fair Trade 보다 먼저 Fair Relationship을 향하여

인류의 3대 재난은 자원고갈, 생태 · 환경파괴, 환경오염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나 농업이 되려면 우선 사회와 자연의 물질관계를 취급하는 논의(학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정복형 생태 · 환경전략과 공생형 생태 · 환경전략이 있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물질 간의 Fair Relationship의 설정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사회가 되려면 물질의 자연 순환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순환이 필요하다. 물질의 자연 순환은 순환성 · 다양성 ·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자연 순환이 올바르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기순환 · 물(水) 순환 · 생태순환 · 영양분 순환이 필수적이다. 순환이 막히거나 파괴되고, 다양성이 축소되거나 상호의존적 관계성이 소홀하거나 일방적이 되면, 지속가능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기(氣) 막혀 죽겠네"라는 말은 선조들의 지혜다. 기(氣)가 막히면 생명은 죽는다. 근대화 사상에 찌든 현대인들은 서양에만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자원과 폐기물의 물질순환을 생각했던 것도 우리 선조들이다. 찬란했던 4대 문명은 무엇 때문에 지속가능할 수 없었을까? 물질의 자연 순환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자연에서 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고, 동물은 죽으면 미생물(균)이 그 시체를 해체하고 분해한다. 모든 생명은 죽어서 한 줌의 흙(영양분, 토양)으로 돌아가고, 토양의 영양분은 다시 식물의 먹이가 되는 생태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대 물질문명이 만들어 낸 서

양식 녹색혁명형 농업은 농약이나 제초제를 쳐서 식물을 죽이고, 살충제를 쳐서 동물을 죽이고, 살균제를 쳐서 미생물을 죽여 생태순환을 파괴하는 구조며 반(反) 생명적인 문명구조다. 생명들이 죽어가는 데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겠는가?
자원고갈 · 생태, 환경파괴 · 환경오염을 억제하면서 지속가능한 순환형 농업에 토대를 둔 순환형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삼라만상의 Fair Relationship의 회복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2. 순환이란 무엇인가?

생물학에서 순환은 2가지 경우가 있다.
1) 관계의 순환, 즉 실제로 물질이 회전한다는 의미의 순환: 지구에서 증대된 엔트로피를 물의 순환에 의해 우주에 버리는 것 같은 경우로, 대기나 물(水)의 순환이 대표적이다.

2) 상태의 순환, 즉 생물의 어떤 상태가 차츰 변화하여, 다시 최초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순환 : 서울역에서 정해진 시간에 부산역을 향해 달리는 경우 날마다 반복되지만 동일한 열차가 동일한 승무원과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물(질)이 회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태가 회전하는 것이다. 반드시 동일한 물(질)이 되돌아오지 않아도 관계는 동일하게 진행된다.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생물은 순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라 최초에 있었던 것은 순환이다. 순환은 상태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 전체 모습 자체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알이나 닭처럼 한 측면만 보인다. 생물이 진화하여 최초로 순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닭도 계란도 아닌 다른 형태의 순환이었다.
우리들 눈에 보이는 생물은 모두 순환의 결과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 物의 質이나 形과 같은 것은 모두 사라져도 순환은 존재한다.

생물 세계의 다양성이란 생물의 종(種)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용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그 현상에 나타나는 다양성을 모두 의미한다. 따라서 생물 세계의 다양성에는 순환 사이클의 다양성도 포함된 것이다.
순환은 1년에 한번 회전하는 것이 많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회전하는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계절이 나타나고 생물들도 이 환경에 살아가기 위한 적합한 순환을 한다. 이 밖에 달(月)을 주기로 일어나는 순환도 있고, 밤낮을 주기로 일어나는 순환도 있

다. 기본적으로 1년 주기가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 몇 분의 1, 또는 몇 배의 주기가 성립된다. 다양한 상황이 모두 골고루 가지런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순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환경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3. 순환 파괴의 책임은 직접적으로는 자본, 그리고 인간

어업・임업・농업 등 '전통적 토지이용'은 생물의 순환 가운데서도 특히 곤충의 순환과 함께해 왔다. 곤충은 동물의 종 다양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형 동물에 비해 곤충은 작고 종도 많기 때문에 미세한 상황까지도 계속 재현되어야 보호할 수 있다. 곤충은 대형 동물보다도 훨씬 미묘한 차이를 가려내어 순환을 성립시킨다.

곤충은 식물을 먹고 새 등의 먹이가 되면서, 식물과 대 동물 간의 식물연쇄에서 중간계층 역할을 한다. 곤충의 순환이 일정한 주기로 이루어 질 때 식물・동물과 인간이 공존을 할 수 있다. 이 공존이 허락되지 않고 보장되지 않으면, 순환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 순환 1회전 사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전부 만족되지 않고 결여되면 순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순환이 단절될 것 같은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곤충이 알에서 유충을 거쳐 성충이 되는 과정에는 각 시기마다 요구가 있다. 그 요구는 종마다 전부 다르다. 그 중 하나만 결여되어도 순환되지 않는다. 각각의 종이 여기 있다는 것은, 그 생물이 발생, 진화하여 온 현재까지 순환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환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생물은 사라져 버린다.

인간이 매년 동일한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농업 주기에 합당한 생물이 그 지역에 존재하게 된다. 인간이 농업을 통해 자연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관리・경영방식에 따라 곤충의 종도 지방마다 조금씩 달라지면서 다양성이 풍부하게 되므로 곤충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결국 곤충의 순환이 흙・미생물・식물・동물・인간의 공존을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서는 전통적인 유기・순환농업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산속에서도 곤충이 감소한 것은 인간에 의해 다양성의 축소라는 이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식물의 물질순환에 따라 천이(遷移)가 일어나고 極相林이 발생하게 된다. 전통적 농업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리・경영이기 때문에 極相林이 발생하지 않고 천이도 방해받는다. 따라서 極相林도 중요하지만 里山을 가꾸는 것도 자연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里山처럼 자연을 관

리 · 경영하면 생물 다양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4. 순환의 속도 · 주기 · 루트

1)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 순환의 핵심

인간이 석유 에너지를 초지(草地) 관리와 경영에 사용하면서 순환의 속도와 주기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비료, 농약, 비닐하우스로 채소와 과일은 연중 생산 되면서 순환 속도는 빨라지는 대신 자연 주기는 사라졌다. 토지와 자연에 대한 안정된 순환 주기는 교란, 붕괴되었다. 인간사회의 필요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기업 소유자가 대자본으로 에너지를 농업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토지 문화의 안정된 주기를 무시하고, 돈 벌이에 맞춰 자연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작물의 주기와 잡초의 발생, 풀베기 주기와 꽃 피는 주기 및 곤충의 주기가 상호의존적으로 관련된 것이 생물 간의 공존관계다. 그 공존관계의 지속성 속에서 농사가 가능한데 이 주기가 서로 적합하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올 해와 다음 해에 행하는 시기가 동일하지 않으면, 병균해나 병충해가 발생하게 되어 그 시기에 의존한 생물은 전부 사라져 버린다. 곤충의 주기나 미생물 균의 주기를 무시하고 돈 때문에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 · 환경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다.

생물 다양성 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 상호 간의 유기적, 상호의존 관계성의 속도와 주기의 적합성이다. 꼭 EDCs나 GMO 같은 물질을 방출하지 않는다 해도, 인간이 자연에 대해 대규모로, 동일한 주기 없이 관여한다면 생물과 인간의 공존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순환의 관점이다.

2) 엔트로피 감소의 필요성

또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엔트로피가 물(水)의 순환으로 폐기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연 순환으로 폐기 가능한 양이 발생했다 해도, 그 양 이내에서 생물 특유의 속도와 적합하지 않으면 이 또한 순환을 방해하게 된다. 생물 간의 상호의존의 유기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생명계와의 공존은 불가능하다.

5. 생명창고는 農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농업의 공익적 기능 또는 다원적 기능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다 죽어 가고 있다. 거위

가 황금알을 계속 낳을 수 있게 하려면 거위를 살려야 한다. 거위를 살리는 방법이 '지역순환형 농업(사회)'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農'은 생명창고이고, 생명창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자 생명의 사회를 만드는 유전자이다. 그러므로 지역순환형 농업(사회)은'農'을 토대로 출발하여 전체 사회로 확산되도록 전개시켜 가는 운동이다.

인권은 죽은 사람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권리, 즉 생명권이다. 사람답게 살 권리는 무엇보다도 생명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한 존재하기 어렵다. 지금, 살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은 환경과 먹을거리다. 사람이 당장 살기 위해 필요한 신체의 素材(육신의 고기 덩어리)와, 생존과 에네르기(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식생활이다. 먹어야 산다. 인권, 생명권이 올바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환경권과 더불어 식생활권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식생활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위생', '영양'이라는 3가지 조건이 건전해야 하고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순환형 사회는 '農'에 토대를 둔 '食', '農・食의 순환'에서 출발한다.

녹색혁명형 농법과 정책에서 탈피하고, 과감히 전환하여 Fair Relation을 회복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을 토대로 가축의 생리와 행동습관을 존중하여, 자급사료에 의한 자연순환형 축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농업・농촌)의 형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농업문제는 농산물의 절대량이 부족한 기아의 문제도, 생산자를 비롯한 농업 관계자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다. 농산물 필요량은 충족하지만 품목 간 생산 불균형이 심해 막대한 농산물이 수입되고, 연중 다양한 식재료를 값싸게 공급하는 대량 유통의 폐해는 먹을거리의 사건 · 사고를 유발하여 전 국민이 농식품 생산자를 불신하게 하였다. 그리고 소비자는 농식품의 과잉 또는 편중 섭취로 비만, 당뇨 등 생활습관 병의 발병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이 생산과 유통업부터 소비자의 건강까지 이 사회의 모든 먹을거리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며, 이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기본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래 생산과 소비는 언제, 어느 시대에서도 인간사회의 보편적이고 불가결한 경제행위이고 불가분의 관계이다. 생산이 있어야 소비가 가능하며, 또 소비가 전제되기에 생산이 가능해진다. 생산과 소비는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가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다. 생산된 것이 소비되고 그러므로 다시 생산되는 끝도 없는 순환과정이다. 오랜 인류사 대부분의 시대는 천재지변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느 공동체라도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반복되었다.

오늘날에도 생산과 소비의 끊임없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 규모는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은 완결되지만 국민 국가에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은 깨지는 경우가 있다. 국민 국가에서 한 산업이 없어지면 그 산업의 생산은 모두 해외에 의존하게 되며, 해외에서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 소비를 멈출 수밖에 없다. 만약 그것이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농산물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소비에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하는 사회라면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라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농산물 무역도 세계화되며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08년 현재 공급열량 기준 48.7%에 불과하다.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기반은 서서히 파괴되고 먹을거리의 안전성조차 불안해지며 공동체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걸린 식량 문제, 농업 생산과 소비의 바람직한 관계를 직시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2. 농업의 위기: 먹을거리 불안과 식량자급률 하락

농산물은 인간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장기보존이 불가능한 소비재이며,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될 때 시장 집중도나 생산물의 차별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공산품과 차이가 있다. 농산물은 상품정보가 적어 재배방법이나 품질에 관한 평가가 불충분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과잉 생산 시에는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농산물의 가치 실현이 불완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농산물의 불완전성이 자본주의의 시장경쟁에서 증폭되어 농업생산과 소비의 상호의존적인 생존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농산물 상품화가 초래한 먹을거리 불안

자본주의 경제에서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농산물도 대량소비, 대량수요가 발생하며 농산물 상품화가 진전되었다. 농산물 상품화는 농업 생산력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생산자는 격렬한 시장경쟁에 휘말리게 된다. 생산자는 생산성 향상과 상품성 향상으로 적극적인 시장대응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성 향상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농자재와 기술 이용이 이전과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다. 화학비료, 방부제, 살충제 등 화학합성물질을 이용하는 노동절약적 농업 기술이나, 생물의 유기적인 생육을 억제하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계절에 제약 없이 생산 가능하도록 하는 농업기술이다[1]. 그러므로 기계나 농약, 비료를 이용하고 농업경영과 토지이용 방식이 단작화, 전문화, 대규모화 된 오늘날의 농업은 자연에 순응하기보다 공업기술에 의존하는 농업이므로, 이는 공업이 농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에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생물 생육에 인공적인 조작이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먹을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은 영양을 충분히 갖추었어도 건강장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먹을거리의 생산 · 제조과정에 사

1 최근 태양광 대신 LED를 이용한 식물공장은 농업기술의 혁명으로 명명되는 실정이다.

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농약, 방사선 물질, 허가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나 잔류농약 등 대부분이 만성 독성을 갖고 있고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 화학물질은 생산과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맛, 외관, 색 등 품질향상에 사용되거나 장기간 품질보존에 사용되는 자재이다. 그러므로 먹을거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 건강장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한다는 의미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식품오염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은 공업기술이 농업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소재로서, 장기간 품질보존을 가능하게 하여 농산물 시장이 국제적 규모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농업생산과 소비를 괴리시키는 원인이 된다.

결국 농업의 자본주의화로 인해 농산물 상품화가 진전되고 도시 생활양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는 농산물에 대해 상품 평가(사용가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고 말았다. 농산물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농약 잔류성분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는, 상품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비롯한 식품의 사용가치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인류 존속의 문제로, 과거와 같이 먹을거리의 사용가치가 중시되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시장경쟁이 초래한 식량자급률 하락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WTO, FTA 등 농산물 시장에서 국경을 초월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과 식생활 변화에 따라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 보리, 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급감하여 농업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붕괴되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2]. 이러한 현상은 농업의 국제적 시장경쟁과 농산물 수입 압력 때문이며 그 영향으로 국내 농업에서 경영 간, 지역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 경쟁에는 농업 생산과 소비가 갖는 생활원리, 즉 생산자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하고 소비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한다는 공동체 원리가 사라지고, 그 대신 가격으로 표현되는 경제효율 기준의 시장원리가 남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자는 화학비료, 농약 등을 과다 투입한 농업경영에 의존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소비자는 보다 값싼 농산물을 찾기에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한 국가의 농업 생산과,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

---

2 우리나라 농산물의 품목별 자급률은 육류 79%, 채소류 91%, 과실류 85%이지만 곡류는 28%에 불과하다. 국가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생산과 소비에 극심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산지별 대규모 경영을 장려하는 정책이 추진된 결과이다.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자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단일작물 생산을 강요받으며 농업 본래의 역할과 기능이 허약해지고 있다. 생산자는 농업 생산으로 생활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에서 이탈하거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몰입하고, 소비자는 국내생산과 관계없이 육류, 열대과일 등의 식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식품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생존의 기본조건인 농업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경제효율성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에는 생산자의 생활과 소비자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가 식량자급률 하락과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인류의 재생산조차 불안하게 하는 공동체의 위기이다.

3. 농업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성 복원

오늘날 농업생산과 소비의 단절 현상은 식량자급률 하락과, 생산과 소비 현장의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가공식품 증가라는 사회적 거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식품안전성이다. 최근 정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식품안전성 정책에서 마치 농업생산이 소비에 종속된 것처럼 농업생산만을 규제하며 감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예를 들면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기준과 같이 사용자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졌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 규제가 엄격할수록 안전한 농산물이 제공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농약에 대한 직접 피해자는 농약사용자인 생산자이며 환경이다. 농약잔류 기준은 소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표이다. 오히려 생산자는 엄격한 사회적 규제와 감시 속에 자신의 건강과 농촌 환경을 잃어가며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런 사정을 거의 알지 못한 채 거대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포섭되어 식품안전성을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체계를 위한 비용 부담은 주로 생산자의 몫이며 소비자의 책임은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체계라면 사회적 불공정이 고정되고 확대되는 구조이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상호이해나 신뢰는 생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농업생산과 소비의 바람직한 관계는 농업생산의 바람직한 형태를 추구하기 이전에 소비의 바람직한 형태가 우선되어야 한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책임져야 하며 책임에 따르는 비용도 각각 부담해야 한다.

농업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성은 먹을거리 품질에 대해 진정한 사용가치를 자각한 소비자가 식량자급률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로 변하는 것, 그리고 농업에서 농민이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각된 소비자가 식생활을 선택하여 농업을 지키고, 생산자도 자각하여 소비자의 생명을 지키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공생 원리에 기초한 가격과 품질의 조정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 형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물건과 물건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칼 폴라니가 말한 "사회관계가 경제시스템 속에 묻혀있는 상황"이다. 농업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경제를 다시 사회 속에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상품의 거래 관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생활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비에 기초한 가격결정, 안전한 품질을 중시하며 서로를 인식하고 배려하는 관계, 즉 인간관계에 기초한 경제라야 가능하다. 생산자는 농업을 통해 생활이 유지되어야 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통해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생명윤리에 기초한 교환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원리이다.

가격과 품질조정[3]을 통해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농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그 대가로 생산자가 농업생산에 종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교환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농업생산과 소비의 지속성, 인류, 공동체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이기도 하다.

공생원리에 기초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품질을 보장받는 것은 식량자급률 저하와 식품안전문제에 기인하는 생명의 위기, 공동체 존속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소비를 실현할 대안이다. 공동체 일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함께 살아갈 방법은 단순히 경제적 이윤추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가격과 품질조정의 방향

생산자의 재생산을 보장하려면 재생산 가능한 소득이 확보될 만큼 소비자의 가격지불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생산비에 기초한 가격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된 농산물의 품질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고, 그 지표로 제공되

3 생산자와 소비자 서로가 어떠한 품질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품질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정의에 기초하여 생산자가 생산하는 것을 말함.

는 것이 바로 품질 조정의 하나인 '인증제도'이다. 따라서 가격조정과 품질조정은 표리일체로 시행되어야 한다.

인증제도에 기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품질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 제품 사용가치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자가 상품의 좋고 나쁨에 대해 모든 사실을 상품표시나 인증 마크를 통해 전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경영 안정을 요구하는 생산자와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만남과 교류의 장을 통해 농산물의 사용가치, 품질에 대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그리고 얻은 정보나 지식을 활용하여 관계자와 의사소통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을 갖춘 주체가 필요하다.

4. 위기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가 공동 출자하여 민주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하고 이용한다. 우리 사회에도 생산자의 협동조합인 농협, 수협과 소비자 협동조합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경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먹을거리의 불안과 식량자급률 하락 등 농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농협에 대한 기대

식량자급률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농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생산자의 생존권 시위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농협은 최근까지도 경제사업보다 금융 사업에 치중하는 경영을 보여 내외부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농협은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산물의 상품화에 몰두하고 있다. 요즘과 같이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대두되는 때에, 농협이 안전한 생산방식을 보급하고 소비자에게 농업의 가치를 교육하기보다 상품화에 몰두하는 현상은, 낮은 식량자급률과 우리 사회 먹을거리 불안이 같은 원인에서 나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해결의지가 약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농협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크다. 1970년대부터 녹색혁명의 다 투입 농법에 반발한 생산자가 유기농업운동을 자주적으로 실천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유기농업의 가치

를 교육하면서 판매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농협은 무엇보다 먼저 소비자에게 농업의 가치, 농업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생산자에 대한 배려를 요구해야 한다.

농업생산과 소비에 대한 교육은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며, 식생활로 인한 질병은 사회적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생활'의 분야이다. 반면, 경제발전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된 결과 소비자가 농업 생산에 친해질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손자에게 먹을거리에 관련 지식을 전달할 기회가 적어지고 먹을거리에 대해 스스로의 판단에 자신 없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농업생산과 소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인간 재생산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농업생산과 소비의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농업시스템을 생태학, 경제, 사회 측면에서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즉 시장유통에서 농업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가격과 품질로 대체되어 보이지 않지만,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는 생산에 필요한 생산비와 생산자가 생활을 유지할 가계비가 포함되어 있고, 농식품의 품질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이다. 바람직한 품질을 구별할 줄 아는 소비자가 바람직한 농식품을 선택할 수 있고, 바람직한 농식품은 바람직한 생산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인식해야만 사회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협은 바람직한 농업생산 · 소비에 대한 소비자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농협은 그동안 각종 도농 교류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기술 전달이 중심인 생산자 교육에 소비자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과 농업교육이 학교, 직장, 대중매체 등 사회교육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협의 과제

농업생산과 소비의 지속성을 위한 소비자의 사회적 과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주체적으로 참가하며 성장해 온 우리나라 생협의 중심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생산자 조직, 전문유통업자, 생협 등 세 유통주체가 경쟁하는 시장이다. 이 때 경쟁의 척도는 가격과 품질이지만, 가격과 품질이 반드시 상관변수로 작동하지 않는 일반농산물과 달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차별(재배방법)은 중요한 가격결정 변수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소비의 관계 구축을 위해 생협이 추구해야 할 내용은 바람직한 가격과 소비생활의 기준으로서 물품의 품질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농업생산과 소비의 지속

성을 추구하며 친환경농산물 거래의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가는 생협이 해야 할 과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보전되어야 하고, 유통주체가 재배방법에 따른 생산비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차별적인 지불의사를 가져야만 거래가 성립한다. 그런데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 가격결정에서 생산비를 줄이는 문제는 생산자의 기술력과 관련이 있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러한 가격체계에서 소량다품목을 취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은 유통주체의 물류 인프라 정비 정도에 따른 물류비가 가장 큰 유통비용이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에서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는 물류체계를 갖추는 것, 즉 가장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도 낮추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아이쿱생협이 시도하고 있는 단위생협 물류의 통합, 자회사를 통해 일반소비자 대상의 전문소매점(자연드림 매장), 전국 물류시스템 구축은 결국 규모의 경제와 유통 효율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유통 효율화를 위해 전국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사실 지역마다 품목별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유통주체라도 농산물의 물류는 이미 전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으로 전국적인 물류망을 갖춘 유통주체가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할 주체를 발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생산과 소비 주체를 통해 연중 원활한 지역 유통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생협은 소비자가 지불 가능한 적정 가격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약된 품목과 물량이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는 조직력과 소비력을 확대해야 한다.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지속되어야 하고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아무리 유기재배가 바람직하다고 해도 일반농산물과 가격차이가 크다면 소비자의 구매력은 떨어진다. 따라서 어떤 생산방법으로 재배하며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에 따른 실천이 요구된다. 또한 생산자는 유기재배를 목표로 한 생산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노력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은 철저한 품질관리, 즉 재배방법 신뢰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인증제도와 함께 언제든 생산 · 유통정보를 발신, 문의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기본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 양쪽 주체를 육성해야 한다. 생산자는 판로 개척 시에는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지만 판로를 확보한 후부터 소비자 교류에서 소극적으로 변한다. 현재 생협 직원이 수행하는 생산지 관리는 지역밀착형 도농교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생협으로 이관하여 조합원이 직접 생산자와 관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신용이나 신뢰는 엄격한 사회적 규제와 감시보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형태를 추구하는 양쪽 주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신뢰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5. 나가며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는 농업이 지속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업의 위기가 전 국민의 먹을거리 위기로 확대되면서, 이제야 비로소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책임과 함께, 비용부담을 비롯한 소비자의 역할과 적극적인 소비행위 등 소비자의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은 생산과정에서 자연을 이용하여 변화시키므로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누군가는 식량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에 적합한 자연을 만들고 적절히 유지, 관리하면 자연도 유지되고 식량 생산의 지속성도 확보된다.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인간 재생산에 가장 기본이 농업생산과 소비의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농업시스템을 생태, 경제, 사회 측면에서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농업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가격과 품질로 대체되어 보이지 않지만,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는 생산에 필요한 생산비와 생산자가 생활을 유지할 가계비가 포함되어 있고 농산물의 품질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인식해야만 사회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 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허헌중 (지역재단 기획이사)

정부와 농협의 역할에 근본 의문을 제기한 배추파동

지난해 가을 한 달 여 동안 일반배추 한 포기 소맷값이 1만원을 넘는 '김치대란', '배추파동' 사태가 전국을 몰아쳤다. 현 정부 들어 날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불안에 가뜩이나 시달리는 국민들은 더한층 고통을 겪었다. 지지난해 가격폭락으로 밭을 갈아엎는 농민의 아픔이 엊그제 일인데 불과 일 년 만에 가격폭등이 일어났다. 이러한 배추값 급등락은 1~2년 주기로 반복하며 소비자와 농민을 고통 속에 빠뜨려왔다. 지난해 파동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흉작과 낙후된 유통구조, 4대강 개발과 농지전용 등 경작지 축소라는 여러 요인의 복합적 결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 배추파동은 이상 기온과 재배면적 축소 등의 문제로 전문가들이 이미 4월경부터 대책을 촉구한 사태이다. 하지만 정부와 농협은 수수방관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가격 폭락 때 방치하다가 폭등 때 값싼 수입농산물로 대처한다고 비난 받아왔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중국산 수입에 나섰다. 그 후 사후약방문으로 올해 들어서야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크게 노지 채소 수급안정사업 개선,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 산지유통인 법인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대책 중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노지 채소 수급안정사업 개선과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 부분에서 농협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직접 산지에 진출,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손실 발생 시 중앙회 적립금(50%)과 일선 조합 적립금(50%)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인데, 언뜻 보면 계약재배 확대에 대한 농협의 의지가 담긴 듯 보인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유통구조와 정부의 농정실패 속에, 그동안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조합원의 인간다운 삶과 지역조합·품목조합 활성화를 위한 경제 사업은 등한시해온 농협중앙회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반복된 농산물 가격파동 때마다 농민과 소비자들은 "농협은 어디에 있나"며 농협의 역할과 존재이유를 물어왔다. 배추의 경우 농민과 산지 유통인 간의 거

래비율이 약 80%를 상회하고 있어 단기간에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는 어렵다. 산지 계약재배 형태가 산지 유통인의 포전(밭떼기)매매와 일선 조합의 계약재배로 이원화된 체제에서 계약재배 사업경험이 없는 농협중앙회의 시장 참여는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노지 채소류의 경우 농협의 계약재배 사업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농협의 계약재배 비중을 보면, 봄배추・무는 전체 생산량의 1%, 고랭지 배추・무는 26.7%, 가을배추・무는 4.4%에 불과했다. 산지 유통인이 해온 역할을 농협은 왜 못했는가. 그동안 농협이 노지 채소 부문에서 계약재배를 적극 수행하지 못한 배경으로는 계약재배 관련 전문성 부족, 가격 하락 때 손실보전 안전장치 미비, 전문 노동력을 제공하는 영농작업단 부재, 경매 위주 도매시장 일변도의 출하체계 등이 지적된다.[1]
정부와 농협의 역할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배추파동. 앞으로 정부와 농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정부는 시장논리와 경쟁력제일주의의 수입개방농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격 변동에 수요는 비탄력적이지만 약간의 공급 변동만으로도 가격이 급변하는 농산물 수급구조에서 농민과 소비자를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적정가에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소비자국민의 기본생활권이며, 국가의 기간산업 중 하나인 농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은 농민의 기본생존권이다. 도시와 농촌의 민생을 함께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이다. 지구적 기상이변과 국제 곡물가 파동 및 수급불안 악화라는 먹을거리 위기의 시대에, 시장기능을 통한 수급균형 달성과 비교우위론, 그리고 토건개발에 의한 농지축소 정책으로는, 배추파동 같은 농업위기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생안정도 불가능해진다. 농민과 소비자를 함께 살리는 길은 시장만능주의, 경쟁력제일주의,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논리 아래 독과점 자본과 전근대적 유통구조에 휘둘리는 농업을, 먹을거리 주권과 사회적 연대경제를 실현하는 농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협은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발전에 복무하는 연합조직체로 환골탈태하여 생산자협동조합 본연의 정신과 역할로 거듭나야 한다. 배추파동은 농협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2] 농협법 제113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의 노지채소 계약재배 실태와 확대방안」, 『농정연구속보』, 제70권.
2 농협이 정부 농정을 올바로 비판하고 견인하는 농민의 자율 · 자치적 결사체여야 한다는 측면에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이고, 농업과 농민을 앞세워 도시민을 상대로 한 돈 장사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농협법 제13조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는,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협동조직이고, 그 핵심 사업은 협동화를 통해 농민조합원의 농업생산 및 농산물 판매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경제 사업이다. 이 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농협의 현실은 이러한 법 정신과는 크게 어긋난다. 그야말로 돈 장사에 골몰하고, 농민을 위한 경제 사업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협개혁의 기본방향은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즉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을 위한 연합회 조직으로 재편하고, 회원농협을 지역농업 조직화(농산물 생산-가공-판매-소비의 협동화・조직화)의 주체로 환골탈태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 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품목별 전문농협과 기능별 전문농협(판매사업 전문조합, 유기농 전문조합, 협업생산 전문조합, 가공사업 전문조합 등) 및 전국단위의 품목별・기능별 전문조합 연합조직체의 집중 육성(수급조절, 생산품질관리, 공동마케팅 등 마케팅보드의 역할)이 핵심과제이다. 그래서 독과점 유통자본, 산지유통인과 전근대적 유통구조에 포획되어 있는 산지 및 소비지 시장유통의 지배력을 확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배추・무와 같이 해마다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락을 되풀이하는 채소류의 경우 농민조합원과의 계약재배 확대 등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외 소비자 직거래와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주산지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 산업을 확충하여 출하조정과 수급안정을 통해, 그 부가가치가 생산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등, 유통구조의 다양화와 현대화를 서둘러야 한다.

배추파동 속의 국민적 관심, 생협의 대안유통체계

농정 실패를 거듭하며 예상된 파동에도 수수방관해온 정부의 무책임,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산지 유통인에게 떠넘겨온 농협의 무능, 이들 두 조직의 무능이 빚은 배추파동 속에서 희망의 대안유통이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합리적인 가격과 공급체계를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자와 공동으로 직거래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며 윤리적 소비생활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와 활성화를 도모해온 생협 유통체계가 그것이다. 지난해 대형마트와 소매시장에서 일반배추 한 포기가 무려 6천원에

서 1만원 이상 호가하는 파동 속에서도 생협은 일반배추도 아닌 유기농 배추를 포기당 1천 5백원에서 2천원대의 가격에 공급하여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반 시장유통과 전혀 다른 생협 방식의 대안적 유통체계의 주요 차이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거래 방식의 단순한 유통구조와 유통비용의 최소화이다. 일반 시장유통(관행농법 가을배추)의 경우 생산자→산지유통인→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4~5단계 유통단계를 거친다. 이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농민에게 돌아가는 몫(농가 수취율)은 평균 23.6%에 불과하며, 출하단계 32.4%, 도매단계 10.8%, 소매단계 33.2% 등 합계 76.4%가 중간 유통비용(=수확상차비・포장재비・운송비・하차비 등 직간접 유통비용+유통이윤)으로 돌아간다.[3] 지난해 배추파동 시점(9~10월경)에서는 한 포기당 소비자가격이 1만 2천원일 때, 밭떼기 매매로 생산농민에게는 소비자가격의 8.3%인 천원 정도, 출하단계의 산지 유통인에게는 45.3%, 도매단계의 도매상에게는 21.3%, 소매단계의 소매상에게 25%가 돌아갔다고 평가된다.[4] 이에 반해 생협유통은 생산자(생산자단체)→생협→소비자조합원의 2단계 유통단계를 거치는 도농직거래 방식이다. 중간상인이 장악한 유통이윤을 배제하고 직간접 최소 유통비용만 덧붙여 공급된다. 그만큼 소비자가격이 안정되며, 산지 유통인에게 흡수되는 생산자의 몫이 생산자와 사전 협의가격 체계로 생산농민에게 돌아간다.

둘째, 생산비에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사전 협의가격 체계이다. 생협의 먹을거리 구매공급 원칙은 "소비자는 제값으로 생산자에게 지속가능한 생산과 인간다운 생활을, 생산자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적정가격으로 안정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건강한 생명을" 서로 보장하는 호혜성(상호성, reciprocity)에 있다. 영리 목적으로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일반기업과 시장유통과는 그 목표와 운영방식에서 확연히 다르다. 돈이 최고인 자본 중심의 시장・경쟁 논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와 인간다운 삶을 함께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협동・상생 논리'이다. 생협은 적정 생산비 보장을 통해 생산자 농민들이 의욕과 긍지를 가지고 생태친화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의해 적정 가격과 재배물량을 미리 정하기 때문이다. 직거래 활동에는 '계획생산'과 '책임소비'라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약속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

3 농수산물유통공사, 「2009년도 품목별유통실태정보」, www.kamis.co.kr
4 신성식, 「양배추로는 가릴 수 없는 채소 값 잔혹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0.10.8.

한다. 물론 생협도 생태・경제적 환경 변화와 널뛰기하는 시장가격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이 때문에 가격안정기금을 별도로 적립해 생산자의 손실 가격을 보장하는 체계도 갖추고, 급격한 생산비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가격을 조정하기도 한다.[5]

셋째,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기금의 적립과 운용이다. 배추와 같이 출하시기의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경우, 생산농민이 흉작으로 손실을 보거나 일반 시장가격 상승으로 생협과 협의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는 수준일 때, 계약이 파기되거나 생산량의 일반 시장 출하 우려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여 상호 신뢰 속에 생산자의 손실 보전을 통해 안정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직거래 계약재배방식을 지속하게 하는 핵심장치이다. 이를 위해 생협은 소비자조합원과 생산자들의 공동갹출로 가격안정기금을 적립한다. 아이쿱생협의 '가격안정기금'이나 한살림의 '농업살림기금' 운용이 시장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한 계약재배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면서 소비자들한테는 연중 안정된 값의 공급을, 생산자들한테는 제값 보장을 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배추파동 때 생협식 유통이 빛을 발한 것은 이러한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체계 때문이다.

안전한 먹을거리 도농직거래는 윤리적 소비운동

지난해 배추파동 때 트위터에 3포기에 5천원을 주고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저렴한 생협배추에 관심을 쏟았다. 이를 계기로 하반기 들어 생협 조합원 가입이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그런데 저렴한 생협식 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가격문제'에 치우친 탓에 생협의 정신과 지향의 사회적 의제화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 생협식 유통소비의 의의를 생각할 때 가계 지출의 현명한 소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먹을거리의 계약생산과 책임소비의 도농직거래가 갖는 '윤리적 소비' 측면이다.

대형마트와 같은 독과점 유통자본이나, 낙후된 다단계 도매시장 유통자본이 지배하는 일반 시장유통은 타인이나 자연생태계,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자기만족에만 충실한 소비이자, 사적 이윤추구 자본에 포획된 '돈 중심 소비'이다.

반면 안전한 먹을거리의 계약생산・책임소비의 도농직거래 소비는 자신의 소비가 타인, 자연생태계, 지역사회, 농업・농촌・농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소비자조합원(및

5 정규호, 「생산자 - 소비자 신뢰 기반한 '생협식 유통' 확대를」, 한겨레신문. 2010.10.25.

생산지 파트너 농민)의 공동이익 실현과 사회적 공공성에 충실한 소비 즉, '이웃과 협동하고 생산자와 연대하며 자연과 공생'하는 윤리적 소비이다. 이러한 윤리적 소비가 전제되고 윤리적 소비주체(소비자조합원)가 앞장설 때 윤리적 생산과 윤리적 노동(일자리)이 창출・확장될 수 있다.

자신의 소비가 지구생태계와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고, 당장은 가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의 농민과 노동자의 고용을 생각하고, 국내(또는 지역)산 농산물의 구매, 공정무역, 아동노동착취기업의 제품 거부운동 등을 펼치는 소비는, 삶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소비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시민의식의 성숙을 반영한다. 이러한 소비행동은 향후 거세지면 거세졌지 결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소비행동을 '윤리적 소비'라 하며, 윤리적 소비는 품질과 가격 외에 환경 보전, 인권 보호, 동물 복지 실천, 정치의 자유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산 등을 고려한다.[6]

윤리적 소비는 영국의 사회적 책임소비에 연원이 있다. 1950~60년대부터 시작된 공정무역 운동을 연원으로 보기도 한다. 초기에는 불매운동이 중심이었다. 주로 나이키를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제3세계 노동착취, 아동학대, 환경파괴 등을 문제 삼았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자신의 가치지향에 부합하는 윤리적 물품을 구매하는 적극적인 구매운동이 대세다. 윤리적 소비운동은 궁극적으로 독과점 기업이나 일반시장의 비윤리적・반농민적(반노동자적) 관행을 타파하고 정부의 제도개선과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전한 먹을거리의 계약생산・책임소비의 도농직거래운동은, 사적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모순과, 농업・농민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삼는 시장논리・경쟁논리에 맞서, 소비자조합원의 생활협동과 생산농민과의 연대에 기반하여 실천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소비운동이라 할 수 있다.

도농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 '공동생산자'로서 생협의 역할

잘못된 농정과 무능한 농협으로 인한 농업해체, 농촌공동화(空洞化), 농민분해 가속화는, 도농직거래 운동이 단순한 구매공급 사업에 머물지 말고 생협의 가치지향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건설로 나아가길 요청하고 있다. 배추파동의 예에서 보듯 이제 먹을거리・농업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도 아니며 농민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반 시장유통은 독과점 자본의 자기증식 논리가 기승을 부릴수록 소비

6 정원각 외,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상수리, 2010.

자와 농민의 이해에서 일탈하고 양자를 이간질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수입개방 농정과 토건개발전략에 치중하여 농업의 기업화, 경쟁력제일주의, 시장만능(시장방임?)주의로 농민을 몰아세우고 있다. 설령 앞으로 좋은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해묵은 먹을거리・농업 문제는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인 농정 관료의 손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 누가 시장과 정부, 양쪽의 실패와 한계를 넘어 농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야 하는가. 바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당사자인 조직된 시민사회, 특히 조직된 소비자운동으로서의 생협 진영이다. '이웃과 협동하고 도농연대를 기초로 자연과 공생하는 새로운 농민적=생협적 농업・농촌의 재생'을 위해 생협(소비자조합원)이 먹을거리의 '구매소비자'에서 '공동생산자(co-producer)'로 자신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먹을거리의 위기, 에너지 자원의 위기, 생태환경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과 유가 상승,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속출이 함께 상승작용을 하여 세계경제의 위기와 민생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경제와 인간생활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 지역과 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 농업과 환경 등이 파괴되고 있다. 먹을거리, 에너지 자원, 생태환경 문제가 지구적 규모에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제일주의, 시장지상주의, 토건개발주의, 경제효율주의를 재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대안 모색을 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생협 운동은 80년대부터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는 책무와 역할을 해왔다. 그 성과물이 배추파동 때 국민적 관심을 모은 생협 방식의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체계이다. 이제 생협 운동은 이를 토대로 먹을거리・농업 문제에 관한 관점을 새로이 하며 생산농민과 연대・협력하여 '공동생산자'로서 생협의 가치지향에 걸맞은 농업과 농촌을 만들어 가야 한다.

도농공동체를 함께 꾸려가는 공동생산자의 역할로는 생산계획의 공동수립, 생산자금 지원 또는 선급, 제철농산물꾸러미사업 조직화(공동체지원농업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가공 산업의 장치시설 또는 복합단지(클러스터) 조성의 공동 참여(자본출자 및 운영), '농촌다움과 쾌적하고 풍요로움'을 유지・보전하는 생태마을 만들기, 제2 주택 갖기 및 지역생협・소모임의 생협공동체농장(시민농원) 만들기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며, 그동안 많은 생협들이 추진해왔다. 최근 아이쿱생협이 충북 괴산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생협밸리' 계획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공동생산자・공동기획자로서 생협운동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공동생산자로서 성찰해보아야 할 점은 먼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농업・농촌의 위상에 관한 관점이다. 농업과 농촌의 유지・발전은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필수적인 기본조건이다. 이는 선진국들의 자국 농업・농촌 유지・발전 정책에서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이며, 선진국 진입의 기본 조건이다.[7] 선진국들은 이미 20세기 들어서부터 농업・농촌이 먹을거리・에너지 자원・생태환경을 통합적으로 갈무리하는 산업・공간이라는 점을 중시해왔던 것이다.

그러면 선진국들에 비해 오늘 우리 농업・농촌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소비자국민의 생활권 위기, 나라살림의 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할 농민의 생존권 위기, 자연과 공생・조화하며 풍요롭게 살아야 할 지역공동체 위기의 시대이다. 안전한 먹을거리의 가능한 안정적 자급, 에너지 자원의 가능한 지역 내 자립 순환,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농업・농촌 시스템의 전면적 재구축 등은, 사회와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기본 과제이다. 그러나 이들 과제들은, 성장제일주의, 시장지상주의, 토건개발주의, 경제효율주의 세력과 정책들로 인해 겹겹이 가로막혀 있다.

소비자국민은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농민을 살려내 우리 사회와 나라를 살리고 나아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위기는 바로 우리 사회・나라・인간의 지속가능 위기임을 인식하고,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여 국민 모두의 농업・농촌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모두가 당사자 주체가 되어, 국민의 사랑과 참여 속에 농업・농촌이 본연의 다원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하는 세력과 정책들로 인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갈수록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인간답게 사는 생활인으로서 연대하고 상생하는 도농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개해온 안전한 먹을거리의 계약생산・책임소비의 도농직거래운동은 이러한 연대・상생의 도농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할 것이다.

계약생산・책임소비의 도농직거래와 생협의 대안 만들기

배추파동에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생협의 유통체계가 일반 시장유통과 차별적인 것은 단순히 '질 좋고 값싼 물품 공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적 이윤 추구라는 자본

---

7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농촌의 유지·발전 없이 결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S.쿠즈네츠 교수)

중심의 시장・경쟁의 논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상생의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사람 중심의 협동・연대의 논리'로 운영되는 데 있다. 일반 시장유통과 달리 계획생산과 책임소비의 생협 유통에는 상호 신뢰와 상생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상호 신뢰와 상생의 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 사회적 연대성 제고를 추동하고 보장하는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규범, 네트워크, 자발성,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핵심은 사회적 신뢰다.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될수록 국민간의 신뢰가 높고 사회개혁과 경제발전이 촉진된다. 반면에 사회적 자본이 낮은 수준일수록 사회개혁의 지체와 사회분열이 초래되고 경제적 효율성도 저해되므로 사회발전이 가로막힌다. 최근에는 화폐자본과 인적자본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자본이 경제발전・사회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배추파동에서 사회적으로 검증된 생협의 유통체계는 '상호 신뢰와 상생의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협동・연대의 논리'로 작동한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이처럼 소비자조합원 간에,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상호 신뢰와 상생의 파트너십을 고양시키는 생협 운동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의 계약생산・책임소비로 생명과 농업과 지역과 환경을 다함께 살리는 생협 운동의 참여자 확대와 사업 활성화는 그래서 사회적 신뢰(사회적 자본) 그 자체이자 사회적 신뢰를 배양하는 동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생협법 개정으로 생협 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조합원 간 상부상조사업으로 협동조합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공제사업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생협의 사업이 「농수산물・축산물・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및 환경친화적용품 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공급하는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변경되었고,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기대된다.

생협 운동의 사업 확대와 조합원활동 활성화로, 갈수록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먹을거리・일자리・보육 및 교육・주거・보건의료・노후 등 이른바 6대 민생불안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앞으로 생협의 사회적 자본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활협동운동・지역살림운동으로 발전한다면, 민생불안을 해소할 협동과 상생의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사회개혁이 촉진될 것이다.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신성식 (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1. 소비자 생협과 소비생협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이 일정한 계급이나 계층을 기반으로 한 사업 중심으로 조직되거나, 신용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과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왔다. 소비자협동조합은 통상 계층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으로 여겨졌으나 점차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협동조합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 것일까?

우선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는"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다. 법률[1] 에서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세상에 소비자 아닌 사람이 있을까? 농민과 노동자는 소비자가 아닌가?

농업 생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급자족형 생산이 가능하나 이조차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소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비자 일 수 밖에 없다. 자급자족을 하더라도 결국 생산자는 곧 소비자이고 소비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이치이다. 결국 소비자협동조합은 특정한 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문제를 협동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인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협동조합이 아니라 소비협동조합이라는 정의가 더 정확한 개념이다.

이 같은 문제는 농협에도 존재한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이다. 그렇다면 농협은 농업을 위한 협동조합일까? 아니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일까? 농업과 농민 모두를 위한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농업과 농민의 이해가 다를 경우는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 한-미 FTA, 나아가 한-중 FTA가 추진되고 있는 요즘, 농업을 위한 일과 농민을 위한 일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0

1 소비자 기본법 제2조 (정의)

년, 이상 기온으로 인해 일어난 농산물 파동이 그 좋은 예다. 농산물 가격 폭등이 농민들에게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가격 폭등이 늘 농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은 많다. 반대로 풍년에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도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구조는 농민들이 가격 폭등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는 결국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가격 폭등이 지속되면 소비자는 값싼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게 되는데, 수입 농산물을 접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너무 높다고 인식하게 된다. 국내농업이 아니어도 농산물 등 식량이 안정되게 공급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협은 혼란스러움을 겪는다. 농협은 농업과 농민의 이해를 상호 절충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절충을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당장의 소득을 줄이거나 양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안정된 소득이 보장될 전망이 약한 상태에서 당장의 높은 소득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미래에 대한 신뢰 또한 없다. 농민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이 아닌 농민협동조합이 된다. 그렇다면 농협이 농민협동조합이 되는 것은 문제인가? 농민들이 주인이므로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당연한 것 아닌가?

현재의 농업 조건에서 농협이 농민협동조합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농민들에게 다수결로 목표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농민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찬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미래의 일일 뿐, 현재의 농민들은 많은 고통과 손실을 감당해왔다. 그래서 농민들은 당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반 정책들이 집행되길 원할 것이고, 농민협동조합이라면 그 주인인 농민들의 요구를 시행하는 것이 '민주적 운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정이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다. 현실 세계에서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지만 주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 농민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높이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활동해야 사회적인 공익의 기능이 높아진다. 그러려면 농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익의 수혜자인 국민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민들의 이익이 감소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은 이마저 실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높은 지대와 부재(不在)지주 문제이다.

땅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차세대 농민들은 농사를 통해 수지를 맞추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젊은 농민들이 계속 만들어지거나 유입되어야 하는데 결국 높은 땅 값이 차세대 농민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 농지의 60%를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협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농가 부채에 대한 담보물로 농지를 잡고 있는 농협은 지대가 높아지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농협이 농업 개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조직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은 중요하다.

2. '소비생협'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소비자협동조합'이 아닌 '소비협동조합'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소비협동조합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전통적으로 소비협동조합은 저렴한 가격, 정직한 품질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많은 소비자를 조직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힘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그 의문의 배경에는 현대 사회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이 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기본이 되고, 큰 구매력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힘을 가진 협동조합은 버틸 수 있었지만 힘이 약한 협동조합은 버티지 못했다. 약한 협동조합은 합병을 하거나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악수(惡手)까지 동원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세계화가 확대될수록 더욱 심화되었다.

많은 협동조합을 사라지게 만든 대기업도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사회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적합한 생산방식이 아니다. 며칠 굶으면 무엇이든 맛이 있지만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맛있던 은어가 도루묵이 되는 이치이다. 협동조합의 출현도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산업사회 초기에 제조, 유통 등 산업 문명 모든 분야에서 자본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며 횡포를 부렸다. 이 시기 협동조합은 배고픈 시대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이었기 때문에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당연한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배고픈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요구가 주류가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1970년 말부터 다시 기지개를 켰던 한국의 소비자조합은 이러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시대변화의 격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단기간에 침몰되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유통 산업이 현대화되면서 소비자 조합이 담당했던 현대적인 유통업의 역할은 그 이점을 잃어버리면서 급속히 약화되었다.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생협이다. 생협은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슈퍼마켓에 진열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 공급을 목표로 삼았다. 새로운 상품은 농민들이 알아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식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면 대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라질 수밖에 없다. 소비생협은 전통적인 소비자 조합의 역할뿐 아니라, 현대적인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상품을 공급하는 일이 추가되었다. 현대적인 요구란 대량 생산된 시장의 상품이 아닌 자신의 요구가 반영된 일종의 '맞춤형 생산'으로 만든 상품이며, 유기농산물, 안전한 먹을거리, 공정무역, 공동육아, 대안교육, 책임 의료, 맞춤형 가구와 주택 등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생협이 전통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자와 공급자가 시장에 있어야 한다. 생협의 생산자는 시장의 주변부에 있는 공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과 생협의 만남은 새로운 생산과 공급방식을 만들어가면서 '시장 외 유통'을 구축해왔다. 이 방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시장 외 유통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필요한데 여기에 투입되는 초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고, 다른 하나는 확대되는 조합원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한국의 생협은 '시장 외 유통'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초기에 재정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규모, 저임금, 투자 부진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조건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1997년 환경농업법이 제정되고 유기농업이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길은 장단점이 분명했다. 환경농업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시장 외 유통'이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대량생산의 어두운 측면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유기농업이 시장유통으로 편입되면 가치하락, 관리감독의 어려움, 법적 기준 완화라는 문제가 일어난다. 가치하락이란 3년 유기농산물과 30년 유기농산물이 같은 가격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인증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해 농약 사용과 혼입의 문제가 줄어들지 않으면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상 기온이 계속된 2010년 내내 생협은 농약 검출과 비(非)인증품 혼입을 막아내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 완벽한 유기농산물이 아니어도 국가가 만든 인증 스티커 하나만 있으면 시장유통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증의 법적 기준 하

향화란 국가가 인증 제도를 관리하는 나라에서는 모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인증의 기준이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타협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초기에 유기농업에 관한 국제기준이 엄격해서 기업농, 기계농 방식만을 구사하는 농식품 대기업들이 쉽게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상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 대기업이 유기농업 생산에 허용되는 자재들의 폭을 확대하면서 유기농업의 상업화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유기농업이 시장에 편입되는 상황에서 생협은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을 선호 했지만, 대기업이 주도하는 상업 농업으로 인해 유기농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대량생산 체제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점이 언제 될 것이지, 소비자들의 이탈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 이에 대한 준비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등등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다. 결국 소비생협의 미래는 현대 산업사회의 대량생산-대량소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면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3. 생협과 농업

현재 지역생협들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과 농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우리들의 고향이고 공동체의 터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생협 내부에서는 농업이 가장 생태적이며 농업의 혜택을 헐값에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반성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

대략 인류 역사를 50만년이라고 할 때 인류 문명을 가능하게 한 농업은 약 1만년 정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생태적인 문명은 농경시대가 아닌 수렵과 채취가 삶의 기초가 된 49만년 동안의 시기였다. 농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대 인류의 문명도 가능하지 않았다. 인류 역사에서 농업의 발달은 계급과 국가를 탄생시켰고, 대규모 전쟁이 가능한 경제적 토대를 만들었다. 1만년 동안 영광을 누리던 농업은 불과 2백년 만에 무너지면서 현대 산업문명에게 주인공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농업은 급속하게 쇠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농업이 아닌 농민들이 쇠퇴하는 현상이었다. 농업은 현대 과학기술에 의존하면서 점차 규모를 확대해갔고, 그 동력은 대규모 농기업이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이 농업에서 떠밀렸고 남아 있는 개인들은 무력화되었다. 다양성이 무너지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이점이 사라지고 소수 거대한 농기업이 제공하는 식품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곡물메이저인 미국의 '카

길'사가 한국 전체 식량(사료 포함)의 60%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이 식량자급률을 높이면서 다른 나라의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다.

카길, 몬산토 같은 거대 농기업은 소비자의 요구를 우선하지 않는다. 이들은 소비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구조로 굳히려 한다. 결국 소비자의 요구가 쉽게 충족될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소비자가 자신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문제에 대해 좀 더 학습해야만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현대 산업문명이 제공하는 먹을거리에 만족하면서 이런 풍요로운 상황이 지속될 거라 여기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정치는 대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농업과 식품영역에서 대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먹을거리를 제조・유통시키는 기업을 쫓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지속될지 의문을 갖는 이유는 인류의 역사가 그런 식의 순기능으로 작동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산업문명은 한 국가의 범위를 벗어났고 세계적인 식품기업은 개별 국가의 정치권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국가의 경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농민이 줄어들고 농지도 줄어드는 시대에 생협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생협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많아지는데 생협의 농민들은 약화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생협의 공급능력을 약화시킨다. 생협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자본기업에 의존해서 수요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곧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로 퇴행하는 걸 의미한다. 이는 자본기업과 경쟁을 격화시키고, 결국 생협의 존재 이유와 미래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불러올 것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밀실 사육과 항생제 투입으로 약화된 면역력, 한 집 건너 축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농업 구조, 육류 20억 수출을 위해 몇 조원을 지불하는 농정의 난맥상이 구제역 사태로 한꺼번에 불거졌다. 생협 생산자의 농장에서 발병하지 않아도 주변 농가에서 발병하면 같이 묻혀야 한다. 시중 돼지고기 가격이 2배로 오르는데 생협의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물량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2011년 2월 현재 2달간 지속되고 있다. 생협이 돼지고기를 공급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은 어떻게 할까?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대체 소비를 하면서 기다려 줄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공급을 하는 시장유통으로 돌아갈 것인가? 구제역, AI 사태가 앞으로 몇 개월간 지속된다면 생협 운영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친환경 축산물의 공급이 어려우면 국산 축산물 공급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고, 저렴하고 신속하게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은 도드람, 하림 같은 축산 기업이 될 것이다. 생협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들에는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농업의 문제는 생산자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농민들이 생협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야한다. 하지만 이는 축구에서 이기려면 골을 많이 넣으면 된다는 말처럼 단순한 것이다. 생협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생산자를 조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소비자가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더 많은 매장과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기농업의 상업화가 가속화될수록 생협의 생산자도 좀 더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할 것이다. 축산업처럼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일수록 위험을 줄이고 싶어 한다. '70일령 무항생제' 개념을 만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항생제를 쓰지 않고 돼지를 기르려면 축산 농민이 큰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생협에서는 초기에 생후 70일까지는 돼지 사육에 항생제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쓰지 않는다는 일종의 중간단계를 설정했다. 무농약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저농약 인증을 허용했던 논리와 같은 것이다.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여러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농민들의 위험 회피 행동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때 생협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농민 혼자만 위험을 감당하는 구조가 계속되면 이제 시작된 새로운 변화는 주저앉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생협이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한 방법은 더 많은 소비를 해주거나 가격을 높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며, 대자본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자금을 풀면 쉽게 무력화되는 방법이다.

생협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한걸음 더 다가서는 것이다. 한걸음 더 다가선다는 의미는 생협이 생산의 문제를 선택하는 것에서 자신의 문제로 바꾼다는 뜻이다. 이 문제의 주체는 생협이 아니라 농협이 담당해야 맞지만 이 땅의 농협이 이 문제를 책임질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생협은 허허벌판에서 출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련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생협이 생산의 문제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생협 혼자만이 아니라 손에 꼽을 정도지만 지역농협들이 함께 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협 소비자들의 신뢰가 많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생협은 모든 걸 갖춘 후에 행동하기보다는 옳고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왔다.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생협의 생존 자체가 중요했던 시대에서 이제 생산의 파트너로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에 이런 장점들이 있어 시작할 기반은 갖춘 셈이다.

4. 생산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윤리적인 소비운동의 긍정성은 바람직한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생산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우선 소비자가 윤리적 생산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해 온 윤리적인 소비 운동은 소비자의 양식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나 한계가 분명했고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윤리적 소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소비(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유통과정을 합리화하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지만 유통은 기술 분야가 아닌 규모와 비용의 분야이므로 한계가 많은 상태이다. 결국 소비자에게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생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이유일 뿐,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생협이 생산 문제에 집중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생산을 바꿔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문제를 생각해보자. 현대 문명에서 자동차는 자원을 소비하는 에너지 사용 주범 가운데 하나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 없는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트럭과 농기계에 의존하지 않는 농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자동차를 버리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에너지원을 이용한 자동차를 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중의 바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자동차 기업의 미래가 달라진다. 미래 자동차의 대표 주자인 전기 자동차는 환경운동이 아닌 자본과 기술이 주도하고 있다. 캠페인과 시민운동을 통해 변화가 가능한 분야는 정치와 제도 개선 등 사회의 제한적인 부문이다. 미래의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생산과 상품이다. 이는 식품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비 생협의 역할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생산 기업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 협동조합이 어떻게 하면 신라면을 저렴하게 구입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앞으로 생협은 신라면보다 더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라면을 생산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조건에서 선택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선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조인 생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과정은 많은 시행착오가 수반된다. 시행착오는 성공을 위해 한발 한발 다가서는 것이지만 그 바탕에는 많은 재원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5. 생협의 생산과 경쟁

생협이 소비의 문제에서 생산의 문제를 자신의 영역으로 껴안아야 하는 분야는 농업만

이 아니라 식품 제조업, 주택, 에너지, 문화, 교육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기존 생협의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껴안는 방식도 있겠지만 새로운 생협을 설립하는 방식이 더 많을 것이다. 생협이 생산문제를 껴안았던 방식은 직접 생산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생산 분야의 기업과 파트너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역량 있고 내실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 계열로 이미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생협의 제조 가공업체는 적은 자본, 부족한 개발역량,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꾸준한 성장을 통해 튼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중소 제조업체는 생협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것인가? 이들은 어떤 위험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중소업체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자금 부족, 개발력 부족, 판매망 부족, 인재 부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역량은 부족한데 경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경영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힘을 집중해야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창업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 개발, 제품 개발에 집중하기 보다는 판매와 자금 문제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 기술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를 창업하면 회계 서비스를 높이기보다 영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왜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시장 경쟁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역학 관계 때문이다. 힘이 없고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도태되지 않으면 사회전체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자연 생태계의 약육강식 논리가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자연생태계와 인류문명의 차이는 자연적인 조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이다. 예를 들어 육식 동물은 먹지 않을 것을 미리 사냥하지 않고 초식동물은 풀을 베어서 저장하지 않는다. 자연생태계의 약육강식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존재한다. 사자에게 잡힌 사슴은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한 마리 정도로 그 범위가 매우 좁다. 사자가 사냥 능력이 떨어졌는데도 고기를 저장해서 먹고 오래 산다면 자연생태계는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생태계와 달리 인류 세계는 퇴출되어야 할 부실 건설사들이 정부의 토건사업 지원을 토양으로 좀비기업으로 수명이 연장된 일본은 20년째 장기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류 문명은 자연계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형성되었다. 인류의 지적, 사회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먹지도 않을 사냥을 하였고 저장 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의료 기술이 발전

해 인류의 평균수명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인류문명은 지구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위협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모으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빈부격차가 사회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축적하는 재산은 자연에서 가져오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희생되었던 경쟁 구조가 사슴 전체가 몰살되는 경쟁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슴 전체가 몰살될 수 있는 환경은 사슴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생물들이 진화할 때 위험이 크고 생존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자손을 많이 만드는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이 능력이 제대로 발달되는 방향으로 진화되지 못하면 그 종은 사라지게 된다. 인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아 사망률이 높을 때, 전쟁을 거칠 때 출산율이 높아진다. 출산율이 높을 때 식량이 충분하고 의료체계가 뒷받침되어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면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구 증가는 인류의 생존 경쟁을 증가시키면서 자연 파괴가 더 가속화되고 인간과 인간의 경쟁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킨다. 자연의 경쟁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류 문명은 무한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인류 문명이 무한 경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원인은 몇 십 년 사이에 수 백 만 명이 희생되는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위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쟁은 꼭 필요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모든 생명활동은 곧 경쟁이다. 햇빛을 향한 식물들의 경쟁, 초지를 확보하기 위한 초식 동물들의 생존 경쟁이 그러하다. 생존 경쟁을 거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 그러므로 생명 활동의 본질은 생존을 위한 타자와의 경쟁이며 투쟁이다. 인류 문명도 마찬가지로 경쟁 없는 사회와 역사는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인류의 경쟁은 자연계의 경쟁과 질(質)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류 문명은 과잉 경쟁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 무한질주는 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다. 과잉 경쟁은 다른 생명체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면서 더 극단적인 경쟁의 상태로 만들고 있다. 과잉 경쟁은 경쟁에 참여한(또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데 패배한 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승리한 자는 모든 것을 차지하는 상태로 발전하는데 이를 '승자독식'이라 규정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아직도 아프리카 부족 간에는 원시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식량과 여자 문제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상대부족을 멸족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신도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형태와 질에 따라 문명이 다르게 발전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전투력이 강했던 칭기즈

칸의 경우 전투력은 높았지만 그 문명은 길지도, 찬란하지도 않았다. 칭기즈 칸은 정복을 한 다음 항복하지 않으면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엎드리게 해 허리나 뒷목을 베어 죽이는 도복(屠腹) 처형으로 유명하다. 이와 달리 로마를 세계 제국으로 만든 율리우스 카이사르[2]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이해했다.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땅에 사는 부족의 기득권, 종교, 문화, 언어 등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다. 카이사르가 원한 것은 정복지의 로마화였고 최소한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으로 세금납부와 징병이 핵심이었다. 야만족일지라도 로마 군대에서 복무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포용력이 높은 방식이었다. 2000년 전 로마 문명은 많은 정복 전쟁을 했지만 카이사르의 천재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 1천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유럽 문명을 구축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경쟁은 어떤가?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경쟁이란 죽기 아니면 살기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경쟁의 비극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가까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1차 대전 이후 독일은 전후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초(超)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실업자가 800만 명이나 되는 사회경제적 불안은 아돌프 히틀러의 집권을 가능하게 해 2차 세계 대전과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되는 비극을 불러왔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상생의 정신으로 독일을 재건시켰다면 이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문명을 유지하고 역사 후퇴를 막으려면 경쟁의 문화와 질을 바꾸어야 한다. 무한 경쟁에서 유한 경쟁으로 승자독식이 아니라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생협이 배워야 할 것은 미국식 경쟁 문화가 아니라 고대 로마의 상생의 문화이다.
상생은 바람직하지만 기생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은 필요하지만 무한 경쟁은 금지되어야 한다. 상생이 기초가 되면서도 선순환의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주의는 경쟁의 기본 원리를 무시했고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너무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쟁은 한정된 지구 자원이 고갈되는 속도를 높이면서 대(大)인플레이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생협의 생산은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 최적의 효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최적의 효율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재료 등 자원 효율, 재생 에너지의 도입, 인적 자원 효율화를 통한 비정규직 금지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생산자의 힘만으로는 추진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연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생협의 파트너가 된 생산

2 로마의 군인·정치가(B.C.100~B.C.44). 크라수스·폼페이우스와 더불어 제1차 삼두 정치를 수립하였으며, 갈리아와 브리타니아에 원정하여 토벌하였다.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경쟁은 시장에서 동일 분야의 기업과 벌이는 본질적인 경쟁이어야 한다. 꼭 1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꼴찌가 되어서도 안 된다. 생협의 클러스터는 이러한 원리로 설계되어야 한다. 개별 기업이 기술개발, 제품 개발에 집중하도록 장려하면서 영업, 자금, 물류, 홍보, 회계, 인력 등 제반 경영 자원은 협력을 통해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협력과 상생의 토대 위에서 기술과 제품 개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생산적이고 본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다. 그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극단적인 경쟁이 아닌 새로운 상생의 문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생협의 사회적 과제는 이러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언제: 2011년 1월 25일 (화)　어디서: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의실
참석: ▶아이쿱생산자회 회원 (박석원: 상주, 포도・사과 | 유재흠: 부안, 쌀 | 주정산, 홍성, 쌀・축산)
▶일반 농민 (김진원: 부안, 쌀・밀)
사회/정리: 오미예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사회: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아이쿱생협 소비자들이 왜 생산을 같이 고민해야하며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가야하는지, 아이쿱생협의 생산 정책과 한국농업의 문제에 대해 생산자들께 깊이 있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참석자 모두 1차 생산자분들이신데 먼저 1차 생산자로서 체감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땅값은 뛰고, 일할 사람은 귀하고…손 많이 가는 유기농업 하기 어려운 현실

주정산: 홍성은 다른 지역과 달리 농사 규모가 작아 생산자들이 어렵습니다. 평균 3~4천평 정도 규모로, 그중 쌀농사 50%, 채소 50% 정도며 축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쌀농사의 경우 전국적인 시세에 따라 그러려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채소농사의 경우 지역이나 기후 변화에 따라 풍년과 흉년의 차이가 심합니다. 풍년의 경우 유기농산물도 소비가 둔화되고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흉년의 경우에도 아이쿱은 판매대행제[1]에 따라 이미 가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잘 받지 못하지요. 그래도 풍년일 때는 생산량이 많으니까 팔고 남는 걸 다른 곳에도 팔수 있지만, 흉년에는 유기농업도 마찬가지로 수확량이 많지 않아 실제로 더 많이 손해를 봅니다.
작년도 배추파동 때 홍성의 농가에서 배추 2만 포기를 심고 생협과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환경농업을 취급하는 곳에서 사겠다고 했지만 생협과 한 약속 때문에 팔 수 없었습니다. 풍년이 들 때나 흉년이 들 때마다 생협의 조합원들이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팔면 그동안 구입해 주던 소비자가 일반농산물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뛰었다고 생협 출하 대신 시장에 팔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

1 판매대행제와 이후 등장하는 탄력가격제, 가격안정기금 등에 대한 설명은 64쪽을 참조하시오.(편집자 주)

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배추가 풍년일 때 가격이 싸다고 시장에서 구입한다면 생산자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작년에는 작황이 안 좋아 팔 수 있는 양이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생산자들도 마찬가지로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농산물은 기후 변화 등 여러 조건에 심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인 쌀과 채소의 경우, 늘어나는 생산량을 소비량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1이라는 숫자로 놓고 보면, 생산이 1 늘면 소비도 1이 늘어나야 하는데 0.1밖에 늘지 않으니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21세기 농업은 판매가 보장되고 판매 때 가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농협은 이 역할을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판매망을 가진 생협입니다. 농민들은 농사에 집중하고 판매 걱정은 안하고 싶습니다. 심는 것도 걱정이지만, 마지막 판매 걱정이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민은 생산만 하고 판매는 생협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김진원: 1차 생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골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에 관한 문제겠지만 지금은 기계화된 대규모 농사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대규모 논농사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과거에 비해 오르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박석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귀농인구가 많지만 90% 정도는 은퇴 농가로 노동력이 거의 없습니다. 10% 정도가 직업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입니다. 매출로 보면 해마다 일정하게 늘고 있지만 실제 조사결과로는 경비 상승으로 소득은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재생산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산비는 고정으로 들어가는데 발전적이지 못합니다. 과수의 경우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 받는 방식으로 산을 사야 하는데 땅값은 자꾸 뛰니

박석원 (아이쿱생산자회 부회장)

다. 과수 분야는 수익이 많을 때 10~30% 남는다고 보면, 평균 15%의 수익을 보이는데 그중에서 이자 갚고 원금 상환하면 가계 빚은 매년 올라갑니다. 농사를 20년 지어도 금융비 자체가 계속 오르다 보니 실제 친환경농사를 할 수 있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FTA 타개를 위해 유기농업을 하자고 했는데, 유기농업과 같이 노동집약적 농사는 일할사람 없어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예전 우리지역에서는 고추, 마늘농사를 많이 했었는데 일손이 없어 이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수도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능률은 엉망이어도 유기농업이 이뤄지지만, 이 분들 안 계시면 손이 많이 가는 농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용직 구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5만 원을 주고 사람을 구해 작업하는 분량이, 예전 2만 원 정도의 작업량 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노동력이 없습니다.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유기농사는 감소할 테고 노동집약적인 농사는 결국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현상유지 정도입니다. 소비자들은 신품종을 원하지만, 일손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현상유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통해 획기적으로 수입이 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유재흠: 한국 농업은 3대 불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예측 불가, 정부정책 예측불가, 기후예측불가가 그것입니다. 기후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농업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A작물을 심고 난 이후 시장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농가의 선택폭이 좁습니다. 가격의 폭락과 폭등은 거듭됩니다. 그런데 폭락할 땐 농가 책임이고, 폭등하면 정부가 개입합니다. 폭등으로 농가는 3~4년 동안 입은 손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정부 개입, 특히 정부의 수입정책으로 인해 농가는 시장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

유재흠 (아이쿱생산자회 이사)

격 폭등이 불안하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 되지요. 이런 현상은 우리 농업전체가 고비용 구조일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은 높을 수밖에 없고, 고위험 구조로 인해 언제든지 도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구제역 파동을 보면서 상당수 축산농가가 존폐의 위기와 함께 재입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위험을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부채는 물론 농가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후계자는 없고, 노동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일정하게 예측가능 한 시장정책이 없다는 것이 농업의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김진원: 농가소득이 올라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농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젊은 농부라는 말은 없어지고 자력농만 남아있습니다. 농고, 농대 출신들이 정착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육성해 나갈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고, 농대 출신들은 전문적이지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요즘 언급되고 있는 로컬푸드, 지역농업의 고민 속에서 풀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한 선별, 포장과 같은 1차 가공은 면, 군단위에서 지역농산물을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하고, 지역농가는 학교, 공공급식 등의 납품을 통해 노인들이 작은 농사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저도 생협 하기 전에는 별로 고민 없이 소비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선택하면 됐는데 생협 활동을 하면서 자꾸 듣고 만나고 들여다보니 우리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유재흠: 좀 다른 문제지만 자본의 이동 측면에서 농촌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농사가 고비용구조가 된 이유는 사람과 돈이

주정산 (아이쿱생산자회 감사)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업 현실이 어려운 것과 관계없이 농사 자재 산업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직접 유출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예로 IMF 때 시골에서 땅을 많이 팔았습니다. 도시에서 부도난 자식들의 빚을 갚고 메워주기 위해서였죠. 이제는 거꾸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그동안 나간 것이 투자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와야 하는 자금들이 투자가 아닌 부채개념으로 자꾸 쌓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정리해보니 땅값, 부채, 노동력의 문제가 있군요.

유재흠: 그렇습니다. 농지가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농지의 외지인 소유가 많은데 이는 모두 땅값 상승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도시 사람들은 땅을 생산의 수단이 아닌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박석원: 지대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데 벌레 먹고 못생겼다고 탓하는 소비자 보면 기운 빠져

주정산: 농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농업과 일반농업은 전혀 다릅니다. 평상시 생산량도 다르고요. 친환경농산물도 일반 농산물처럼 같은 모양과 품질을 요구하는 내용의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10개의 생산물을 화학농법으로 재배할 때, 소비자가 원하는 모양과 품질로 9개가 생산됩니다. 하지만 환경농법의 경우 양이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유기농사로 5개 생산하는 것보다 일반농사로 9개를 생산하는 게 생산자에게는 더 낫습니다. 정부가 고비용 환경농업을 할 경우 지원과 보조를 해주는 정책이 있어 생산자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앞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홍성도 보조금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환경농

오미예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업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농업이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자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농업이 갖는 장·단점과 화학농업의 장·단점을 소비가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이쿱의 조합원 수가 11만 5천이라고 합니다. 5만 명이었던 3년 전에 비해 배가 되었습니다. 불과 2~3년 사이에 늘어난 소비자의 상당수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가입했을 텐데 환경농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하나에 소비자들이 좌우되는 것을 볼 때 생산자들은 힘이 빠집니다. 벌레 먹어 구멍 생긴 배추가 나올 수도 있고, 포도에 조금 이상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댓글이 계속 달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시험 보고 생산자회에 가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들도 시험보고 가입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사회: 소비자들도 자격 있는 사람만 가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군요.(전체 웃음)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조합원 층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교육받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흠: 작년의 경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작황이 안 좋아서 미질이 떨어졌습니다. 미질이 좋은 것만 골라내니 100kg로 쪄서 70kg은 나와야 되는데 60kg이 나왔습니다. 생산자도, 중간에 가공하는 사람들도 고충이 많았습니다. 조합원 10만이 넘어서면서부터 공지나 교육만을 통해 소비자들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농업생산에 대한 특성을 알려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이 무조건 생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농업이 가진 특성을 이해해야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들도 즐겁지 않을까요? 벌레가 있으면 오

김진원 (농민)

염된 것 같고, 공해 때문인가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조합원들이 좋은 부분을 잘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게 당연한 거니까 개인적으로만 알고 지나는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조금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널리 퍼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계약생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계약생산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생협과 계약생산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비 부진이나 재해로 인해 흉작일 때에는 계약생산이 큰 의미 없어

박석원: 구두로 시작한 계약생산이 이제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계약하고 직거래를 해왔습니다. 생산자들이 불편을 느껴온 것은 계약물량을 초과해 생산된 물량과 소비부진으로 계약물량을 소화 하지 못했을 때의 무대책이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를 200톤 계약했으면 50톤만 생산되었을 때에는 소비에 문제가 없는데 300톤 생산되면 마찬가지로 시장도 많이 생산되어 시장 가격이 싸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시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체 생산한 300톤은 물론이고 계약한 200톤도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정말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회: 계약생산이 너무 소비자에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석원: 계약과 상관없이 소비가 부진한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지만 수확이 남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여러 문제로 수확이 부족한 경우에만 생산자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나온 물량이 100톤인데 10톤만 생협이 가져가도 생산자는 아무 말 못합니다. 정상 출하의 경우 그나마 우리지역 친환경농업의 경우는 괜찮습니다. 많이 생산되어도 소비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재배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배추를 1,500원에 계약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좋습니다. 수확량이 적다해도 7, 8천원씩 높게 팔지 않고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좋지요. 중요한 건 생산자들이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지금처럼 생협만 잘한 것으로 끝나버

리면 생산자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상 생산, 과잉 생산과 관계없이 계약재배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장가격이 생협의 계약된 가격에 비해 낮으면 계약을 해도 소비가 안 됩니다. 또 문제가 된 사례는 계약대로 공급을 했는데도 시장가격이 높아지니 12월까지 공급해야하는 물량이 10월에 다 끝난 경우였습니다. 시장가격이 높아지면 계약을 해도 방법을 찾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처음에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생협의 상품가격 정책상 평균가격이 중, 저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을 제대로 실행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농사짓는 분들이 자꾸 빠져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 농사짓는 분들이 어디로 빠져 나가는 것일까요?

박석원: 생협만 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환경 시장도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겠지요.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적용하고 있는 탄력가격제입니다. 과장해서 표현하면 가격이 내려갈 때는 바로 다음날 적용하려 하고, 올라갈 때는 작기가 끝나고 다음 작기에 반영하겠다고 하니 실제 별 변동이 없습니다. 한 해 농사가 잘되어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간 가격이 그 다음 작기의 기준가격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생협도 계약 할 때 시장가격연동제나 탄력가격제가 일관성 있게 실행 되어야합니다.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생협도 팀별로 운영되다보니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부분이 자꾸 없어지고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직원들 왔다 갔다 하다 작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연동제로 해서 생산자들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얻기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정산: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는 생협에서 왜 계약이 있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쌀이나 한우의 경우는 다르지만, 채소나 과일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가격에 따라 소비자 조합원들이 생협의 농산물을 소비했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시장이 생협 보다 비싸면 생협 것으로 몰리고 반대로 시장이 더 싸면 생협 것은 소비하지 않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생협에서 시행을 확대하고 있는 탄력가격제와 판매대행제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 탄력가격제는 생협의 가격이 시장의 가격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를 할 수 있어서 소비를 안정적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대행제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모두 책임지

고 판매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예를 들면 배추 계약 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기초 가격과 목표 가격을 정하여 판매대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소비자가 잘 소비해주면 목표 가격에 도달할 수 있고 판매가 둔화되면 최소 기초 가격을 생산자는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박석원 씨의 내용을 보충하자면 예를 들어, 1천 개가 생산되면 300개만 계약하는 게 아니라 1천 개를 모두 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에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 있는데 소비자 뿐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량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하나, 배추 한 포기의 가격으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1천개 계약 후 3백 개를 생산해도 1천개 값으로 나왔을 때와 동일하게 보전해주어야 하고, 생산자도 1천개 계약에 1천백개가 생산되면 백개는 양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협과의 계약이 아닐까요? 그래야 판매대행제도 빨리 정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유리해야 합니다.

사회: 배추가 비싸게 유통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배추를 구입하면, 생산자들에게도 그 가격이 다 지불되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시장유통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생산자들에게 싼 가격에 가져와 중간상인들이 비싸게 판매한 것이 문제였다면, 작년의 배추파동도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 해주셔야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정산: 산지에서는 kg당 650~850원으로, 2kg짜리 한포기로 계산하면 1,500원 정도입니다. 2kg이 안 되는 배추 1만 포기를 심어서 그 전년도에 만포기 수확했다면,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30%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포기 당 계약한 금액은 가격이 좋더라도 총소득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이럴 때에 탄력가격제를 도입하거나 생산안정기금이나 가격안정기금 등을 적용하여 피해를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발생했을 때 생산지를 보존해 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기후변화로 배추뿐만 아니라 사과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기후변화에 맞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배추는 한철이지만 쌀농사나 환경 농업 생산자들은 일반 농사에 비해 가격을 못 받으면 바로 전환합니다. 저는 채소농사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10년, 20년 채소농사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면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제역으로 축산 농가들이 많이 힘듭니다. 저는 이런 재앙이 농산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기롭게 헤쳐 나갈 방법들을 같이 찾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배추파동은 현행 농업 정책에서 예견된 재앙, 환경농업 보조금도 사라져…

유재흠: 저는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작년 배추파동 때 생협의 정책이 생산자들에게는 어땠는지 물어보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생협이 가격의 탄력적 적용과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생산자들은 배추파동으로 값이 뛰어 한포기에 4천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협과는 이미 1천원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중 가격이 너무 뛰니 생산자들에게 그래도 500원정도 더 붙여 1,500원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협의 되어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기대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생협에서 가격을 낮춰 구입 했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가격이 높아졌을 때 한 번쯤 보충되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지요. 상대적으로 기대 한 것에 비해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허탈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4, 5년 주기를 놓고 살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가격이 비쌀 때는 싸게, 쌀 때는 약간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 생산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평가 되었을 때의 가격에 기준점을 두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평가 되었을 때의 가격에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4~5년 주기로 보았을 때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탄력가격제가 본격적으로 적용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전 아이쿱의 가격정책이 소비자 중심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산지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다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산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아이쿱 산지 가격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배추파동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가격을 올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협이 소비자들에게 배추 값을 잘 책정했습니다만 변수가 있었으니까요.

김진원: 배추 파동이 일어나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버스는 이미 지나간 후입니다. 평상시 배추에 대한 가격정책이 파동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배추 값이 계속 안 좋아서 모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일기가 안 좋고 밭이 너무 질어서 모종을 다 해놓고 포기했습니다. 일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작년의 배추파동은 그동안 배추가격 정책 때문에 예견되어 있던 것이라고 봅니다. 가격정책은 물론 다른 정책들이 확대되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정산: 계약은 총량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천개를 전체 계약해서 8백개가 생산돼도 1천개 가격으로 사주어야 합니다. 1천백개가 생산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계약이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흉년이 들 경우 몇 개, 몇 짝이 아닌 전체 양으로 계산해서 계약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원: 일반적인 관행 밀의 경우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수입 밀과도 경쟁해야 하는 변수가 있는 밀은 생산비를 산출하고 생산비의 적정 이윤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생산비와 이윤을 보장한다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 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적정한 가격은 어느 정도이며, 소비자와 농민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틀에 대한 고민을 개인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생협은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는데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점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밀 한가마 40kg을 작년 3만 5천원에 생산했고, 올해는 3만 6천원에 생산하려 했는데 적은 이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지급이나 생산성 증대를 통해 부족분을 메우겠다, 수입밀과의 경쟁에 대비해 재배를 확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런 피상적인 언급만 있는데 기준점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서로 인정하는 기준점 설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비와 생산은 근본적으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진원: 아이쿱 생산정책에 관한 글을 보니 생산비에서 지대와 노동력 제외하고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생산자들이 받아들일지에 대한 합의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석원: 생산비 보전정책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롭게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를 바탕으로 한 생산자의 소득보전 정책인 판매대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참여해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과로 생산된 것에 대해 소비가 부진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 소소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산지에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동참한다면 조기정착과 더불어 생산자들이 요구하고 바라던 안정적인 소득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원: 판매대행제를 통해 매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가격이 결정되더라도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에 들어가는 생산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제 시행 시 부족한 농가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생산비, 이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격정책에서 보전해주겠다고 할 경우의 데이터는 생협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협의 가격정책을 보면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전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박석원: 목표 가격을 우리가 영농한 생산 비용을 기준으로 잡고 정해야 하는데, 품목별로 나와 있는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니 우리 것이 아니죠.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생협과의 거래 당장은 어려워도 장기적으로는 낙관적

사회: 국가에서 정한 '생산표준가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니 실제로 기준을 잡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유재흠: 단면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5~6년 전 생협에 벼를 공급하던 때와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다른 판매처에 비해 가격이 낮은 때도 있었고 조금 높았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친환경하시는 분들과 대화 할 때면 생협과의 거래가 당장은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점차 소비가 확대 될 것이고, 지금은 생산한 물량의 1/3정도밖에 소화가 안 되지만 소비자가 많아지면 전량을 생협이 가져갈 것이라고 봅니다. 품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가격도 지금보다 고평가 될 것이고 생협에 물량이 전량 공급되면 가격이 안정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협이 장기적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협이 소비자 중심의 가격정책 유지를 해왔다고 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다른 납품처와 비교해 낮게 책정된 기준 가격이 당장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을 견지해야 하며,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탄력가격제를 적용해야 될 만큼 소비자도, 생협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산량 문제의 경우 제가 있는 지역은 생협에 전량 판매하면서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습니다. 자금을 빌려 수매하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전에 비해 대금 지급이 빨리 끝나니 농가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좌담회 내용을 살펴보니 생산자들이 과거 고생해서 힘겹게 과실을 이만큼 성

장시켰는데, 이제는 생산자가 감내해서 생산한 과실을 소비자와 함께 나누자고 하는 부분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가격결정 관련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시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격 결정의 주인은 생산자와 소비자입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만 해도 생산지 정책이 실행되지 않아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 주정산 생산자님은 생산전량을 생협과 거래 하시면서 고민을 안 한다고 하셨죠?

주정산: 개인적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 생협 소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늘어나면 저가로 가겠지만 이후에는 과수 같은 친환경작물은 고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면적이 적은 나라라 농산물 생산이 1%만 과잉되어도 가격이 폭락하고 1%만 모자라도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입니다. 주변 국가의 농산물 가격에 민감히 반응하는 나라입니다. 생산물을 식재하기 전에 기초 가격과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판매를 하면서 목표 가격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력가격제의 장점입니다. 기초 가격과 목표 가격을 설정 할 때 생산자는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는 질 좋고 안전하며 가격 또한 소비자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생산자는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소비자는 생산물의 전량 소비를 통해 함께 상생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박석원: 가격 결정 부분도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나아지고 있어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은 매장도 생겼고, 적용기준 가격도 생산자들이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공식적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생산자들에게 권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생산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잘 운영될 같습니다.

생협의 계약재배 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농업에 희망 생겨…자식에게 넘겨주는 농업 된다면 농촌 공동화도 해결할 수 있을 것

사회: 예전의 상황보다는 변화에 어떻게 맞추어 갈지를 고민해야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생협은 대안 운동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타 생협이나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한 사례를 비교해보기도 하고요.
판매대행제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서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요구할 것은 하고, 들을 것은 들어야 하는 자세가 필

요합니다. 생산자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소비자로서 판매대행제, 소득보장이 생산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번 좌담회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다리 역할을 하는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과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생산자분들이 느끼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직원 교육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김진원: 중요하게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나 생산자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텐데 생협은 거래 관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의 생협 시장이 끈끈한 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생산자는 안보이고 물건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계 회복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 교류할 때 농민들도 농업, 환경, 미래 등의 문제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교류는 중요하며 농민들도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유재흠: 저도 논생물 교류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단지 수입이 좀 더 좋은 농사로 이해했던 생산자들의 시각이 활동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농법과 논생물을 통한 농법에서 보이는 생산량과 품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넘어 생산기술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수도작에 의존했었는데 작년 친환경수도작을 통해 자식에게 농사를 넘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생협과 거래를 통해 계약재배가 안정화되고, 품질 안정성이 유지된다면 소득이 많든 적든 예측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농사를 물려주는 것은 계약재배의 장점이 될 것이고,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산: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내 자식이 농사를 지으며 농촌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홍성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지역은 직장 다니던 자식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귀농자들의 유입만으로 지역이 살 수는 없습니다.

유재흠: 생협 생산자들 중 2세 농업인이 상당수라고 알고 있는데 교류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분이 많지 않지만, 친환경농업의 안정된 판로를 만들어주면 생협에 올인하는 생산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협은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네거티브 배상 방식보다 포지티브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계약방식인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힘을 모으면 더 멀리 뛸 수

있고 더 많이 갈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생산자들에게 힘이 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좋을 것입니다.

사회: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박석원: 다른 생협보다 아이쿱 생산 정책이 특별히 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편의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하는데, 아이쿱생협은 생산자 관리가 철저합니다. 다른 곳은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로 끝나는데 우리는 거의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쿱처럼 교차 관리가 이뤄지는 곳도 없습니다. 유통인증협회, 물품위원회, 과수팀이 교차로 방문합니다. 다른 곳보다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는 서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생산자, 농업문제 등에 대해 아이쿱생협은 이전과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협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책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서로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아이쿱생협의 농업정책이 생산자들만큼 직접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직원처럼 가격을 협의할 수 없지만, 서로 잘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잘 드러나게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좌담회와 같은 자리가 자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생산자와 소비자, 직원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시간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판매대행제(탄력가격제)

생산자 농민이 판매에 대한 고민 없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2008년에 시범실시하고 2010년에 본격 도입한 시스템으로 탄력가격제를 기본으로 한다. 탄력가격제는 생협 생산정책의 핵심으로 생산자와 생협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직거래(고정가격제)는 일정한 가격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여러 변수에 의해 생산자에게 손실이 발생해도 보전 방안이 없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탄력가격제이다.

시장가격 흐름, 품질, 생산비, 가치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며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생협에서 행사한다. 생산자는 판매 결과가 좋을 때는 추가 소득의 기회를 얻고, 좋지 않을 때는 가격안정기금이나 출하장려금으로 보전 받는다.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최악의 경우에도 기초 가격을 보장해 생산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 주문량만을 입고하던 방식에서 예비 물량까지 확대하여 계약하므로, 안정된 공급이 가능하다. 생산자는 시장 유통 물량까지 일괄 처리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가격안정기금의 운영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 탄력가격제로 생산자는 추가 소득의 기회를 얻고, 소비자는 위험요인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익을 얻는다.

• 가격안정기금: 출하가격이 수익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수익을 확보했을 때는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즉 모든 생산자와 제조업체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상호부조 성격의 보험이자 공제라 할 수 있다.

• 출하(생산)장려금: 개별 사업장별로 출하농민에게 지원하는 기금이다. 개별 사업장에서 출하장려금을 집행하는 이유는 가격안정기금만으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분야의 성장 동력으로 키울 필요가 있을 때이다.

정리: 손범규(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대학원)
출처: 신성식, <생협의 가격정책과 판매대행제>, 아이쿱 정책자료, 2010.8.17

생협 현장톡

이슈 기획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지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해부한다

조합원 활동가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분숙 (르뽀작가)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 볼 일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입춘도 지난 지 이미 일주일, 눈이 내리고 있다. 마을 안쪽에 있는 절 앞 기와집으로 오라는 김경완 씨의 안내를 받고 차에 오른다. 십 년 전만 해도 적막한 산 아래 마을이었을 이곳이 지금은 아이파크며, 코아루며, 발음조차도 낯선 이름을 단 고층 아파트 숲 뒤로 자리하고 있다.
도시인들의 화려한 기호에 맞추려는 건지 온통 금색으로 도색을 한, 어색하기 그지없는 절 건너편에 낮고 수수한 기와를 이고 있는 촌집이 보인다. 비닐하우스 두 동을 지나 집안 마당으로 들어가 인기척을 내 보지만 집안에는 사람이 없는 듯하다. 잠시 후, 등 뒤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영락없이 농부의 모습을 한 김경완 씨가 "저곳으로 가자."며 손짓을 하신다. 농촌이라고는 하지만 도시와 채 삼분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곳인데 김경완 씨의 모습에서는 도회적인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마음 가는 대로 몸도 간다더니, 오랜 세월 땅과 더불어 농사를 지으며 산 그의 모습은 마을 앞 고층 아파트 단지와는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는다. 집 뒤로 솟아 있는 낮은 산들이 그를 닮았다.

김경완 씨가 안내한 곳은 비닐하우스 안에 마련한 생활공간이었다. 식탁과 난로까지 마련된 걸 보니 그는 대부분의 낮 시간을 집보다는 이곳에서 보내는 듯 했다. 서울이 고향이라는 그의 아내가 커피를 내온다. 김경완 씨의 고향이 경주 산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서울분과 경주분이 만나게 되셨냐고 물어보니 그냥 웃으신다. 하기야, 인연이란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김경완 씨도 IMF때 어려움을 겪으며 이곳에 들어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사람과 땅이 만나는 것도 모두 깊은 인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김경완 씨는 올해 봄부터 울산시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친환경으로 재배된 채소들을 공급할 작목반에 소속된 농민이다. 울산 북구는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울산 북구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모두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비 전액을, 나머지 학년에게는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실시된 배경에는 지난 6.2 지방 선거가 있다. 교육감 선거와 함께 치렀던 6.2 지방 선거는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이 꽃을 피운 시기였다. 민주노동당 소속의 구청장이 당선된 울산 북구는 민주노동당의 공약 실천으로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사진1> 김경완씨의 아내가 시금치 밭에서 손으로 풀을 뽑고 있다.

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하우스 옆 비닐하우스에는 어린 시금치들이 푸른 줄기들을 밀어 올리며 쑥쑥 자라고 있다. 추위에 강한 시금치는 난방비 부담 없이 겨울에 하우스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이다. 농약을 쓰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풀을 뜯어가며 시금치를 기른다는데 하우스 문 옆에는 밭에서 뽑아낸 풀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문 앞에 있는 밭 몇 평에서 뽑아낸 풀이라는데도 벌써 작은 봉분만큼 쌓여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일하는 게, 밭 매고, 손 가고…"

초등학생들이 먹는 밥상 위로 올라가는 작물을 기르시는 기분이 어떠냐는 나의 물음에 김경완 씨의 아내는 그저 힘들다고만 한다. 농사일 힘든 게 하루 이틀 일이겠냐만은, 농약을 안치고 아무리 안전한 생산물을 시장에 내놔 봐도 소비자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현실에 많이 지친 듯 보였다.

"수입 농산물을 이기려면 품질을 높여야 되는 기라. 고급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인식이 되어야 하는 기라. 근데 요즘 주부들은 친환경 농사에 대해 너무 모르는 기라. 친환경 그 농사법 자체는 약을 안치기 때문에 생산된 채소들이 모양이 좀 그래. 벌레도 먹고 크기도 좀 작고 비뚤하고, 그러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안 사는 기라. 나도 예전부터 친환경 농사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돈이 안 되는 거라. 사람들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이게 정부 지원이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우린 생활이 안 되거든."

친환경 무상급식에 물품을 공급하는 일이 농촌에 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는 얼마나 소비가 될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아직 본격적으로 출하도 되지 않은 작물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늘 변방으로 밀려나는 농업, 국제 협상에 밀리고도 자국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농사일을 그는 십 수 년째 해오고 있다. 어떤 일이든 정책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건 대다수 농민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방법이다.

굵기가 다른 감자알을 먹어야 하는 이유

경남 합천군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뿐만 아니라 급식에 들어갈 작물 관리와 납품을 직접 담당하면서 농촌 사회의 변화를 일궈가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여름, 나는 합천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 법인 사무실을 찾아갔다.

“잘 사는 아이들이나 못사는 아이들이나, 아이들은 똑같이 먹고 똑같이 놀면서 자라야 해요. 그 나이에는 인성이 만들어지는 때라 자라면서 차별받고 상처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진2> 올봄부터 급식에 공급될 시금치를 바라보는 김경완씨

세상에 죄 덜 짓고 사는 법을 고민하다 선택한 일이 농사짓는 일이라는 정미영 씨는 법인의 사무장 일을 맡고 있다. 인터뷰 도중에도 자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짐작만으로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듯하다. 진보 교육감이나 단체장이 당선된 지역도 아닌,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경상도의 산간지역이 아닌가. 정말 이런 곳에서 어떻게 군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그 동력이 정말 궁금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첫째는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직접 식단을 짜는 학교 영양사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영양사분들은 양이나 크기가 규격화 되어 있는 식재료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직접 현장에 나와 보면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감자는 알 굵기도 다 다르고 고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음식을 만들었을 때 모양은 덜 나지만 그래도 그런걸 아이들한테 먹여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특히 뿌리채소들은 절대로 약을 치면 안 되거든요."

군내에 있는 하천에 다리 공사를 하나 더 하려는 군청을 설득해서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는 일,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정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건 예산을 움직이는 힘은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생산단가가 높다. 지역의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다 먹이기 위해서 농민들은 가격을 양보했다. 이윤보다는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내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이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에는 처음으로 합천군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친환경 농사 체험도 했다.

"양파도 캐고 토마토도 따고 먹이 사슬에 대해 설명도 하고, 어떻게 꽃이 피는지, 토마토는 왜 빨갛게 익었을 때 먹어야 하는지, 생물학을 전공한 분이 그런 걸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요. 이곳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체험을 하다보면 밭을 밟기도 하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체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농산물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또 농민들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요."

합천군 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된장이나 간장을 직접 학교에서 담가 먹는 '장독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 뒷마당에 햇살을 받으며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장독대를 떠올리는 일은 정겹다. 2011년부터는 조리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2010년 지방 자치 선거에서는 유독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이 두드러졌다. 13개 지역에서

출마한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도 친환경 무상급식이었다. 반대편에서는 급식이 교육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합천군을 들여다보니 급식이 교육의 영역이 아닌 이유를 찾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인 듯하다.

순한 재료들과 느리게 숙성된 양념으로 조리된 음식을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합천군 내의 아이들 중 아토피나 천식을 앓는 아이들의 증세가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중・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합천군을 떠나는 학생 수도 많이 감소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합천군이 뿌린 땅 속 토양까지 살리고 있다.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쌀을 다 팔 수가 있고 찹쌀 같은 잡곡도 재배 종류와 면적이 늘었죠. 학교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채소 농사 품목도 다양해졌어요. 농가 수익도 늘고 농사거리가 있으니까 귀농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고 보니 사무실 주변에서만 해도 어린 아이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파급력은 컸다. 작은 샘물줄기 하나가 큰 강을 이루듯 하나의 변화가 가져올 또 다른 변화들을 나는 이곳에서 예감할 수 있었다.

2011년 2월 7일, 울산 북구 매곡동 농협 하나로 마트 3층에 급식 지원 센터가 입주를 했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안정된 식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없기에 농가와 학교를 아우르는 센터를 만든 것이다.
울산 북구는 예로부터 전통 농업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논과 밭이 있던 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대부분 하우스 딸기나 화훼 같은 상품 작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채소나 과일 같은 작물은 근거리 생산지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운반 과정에 작물이 상할 우려도 있지만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농작물이 자라나는 현장을 보여주는 일도 친환경 무상 급식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다행히 북구에는 앞서 내가 만난 김경완 씨처럼 이미 무농약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이 있어 한두 해 후면 친환경 인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소통이 중요해요. 친환경으로 생산된 작물들이 조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지만 그래도 왜 그런 식재료를 써야하는지는 끝없이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진3> 울산시 북구에서는 올해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단 집행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인수 씨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미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교과 시간을 이용한 식생활 교육이나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도 그가 소통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이다. 그러나 6학년 전체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될 울산 북구의 초등학교를 떠올려 봐도 나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우리에겐 아직 무상급식을 해야 할 더 많은 아이들이 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건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던 공약을 발표한 울산시 교육감은 이 공약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이들의 점심 끼니마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세상이다. 반드시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던 울산 교육감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더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그런 아픔을 생각하는 일은 그저 먹먹할 뿐이다.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으로, 그리고…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급식비뿐만이 아니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연년생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이순영 씨는 홈에버 해고 노동자이다. 두 딸의 방과 후 수업비까지 합하면 매달 34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매 학기가 바뀔 때마다 체육복이며 참고서 값이며 수련회비, 수학여행비 등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니 빚을 내서 사는 것도 한계에 이를 지경에 왔다고 했다.

"방과 후 수업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매번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도 힘든데, 그러면서 방과 후 수업은 또 왜 강제적으로 다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선택의 폭이 없어요. 거기다가 매번 치르는 사설 모의고사 시험도 돈을 내야 하잖아요. 저는 국가가 이런 비용까지 다 지불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라도 하면 좋겠어요."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할 부분까지 사실 대다수의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이중삼중의 비용도 그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선 듯 했다. 교육비 문제를 벗어나, 입시 위주의 강퍅한 학교 교육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해고되고 파업할 때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그는 두 딸의 교육비를 감당하기가 버거워 올해 급식비 지원 신청을 했다고 한다.

"나이 쉰이 넘은 아줌마가 4대 보험이 다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직장의보를 적용받으려면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역의보로 있거든요. 지역의보가 직장의보에 비하면 꽤 높게 측정이 되요. 친정어머니 집이 지금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의보가 더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의보가 높게 나오니까 또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 해서 급식비 지원 대상이 안 돼요. 급식비를 지원 받으려면 학교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이야기 하면서 또 다 털어 놔야 하잖아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리면 더한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더 가난한 모습을 보여줘야 날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힘들더라고요."

쾌활한 성격의 딸이 이런 일로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순영씨는 급식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방과 후 수업이나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이들에게 효과가 없는 수업조차도 강제로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방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서민들의 생계를 조이는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는 듯 했다.

무상 급식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무상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방정현 선생님을 만났다. 그는 올해로 십오 년 가까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교과서 대금, 그 외에 기본 시설, 책상, 의자, 이정도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사실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무상으로 이뤄지는 게 없어요."

한 학기에 일만 원 정도 지원되는 학생 준비물 대금으로 색종이나, 도화지 같은 간단한 준비물 정도를 준비할 수 있을 뿐, 체육복이나 실내화, 미술 도구, 음악 시간에 쓸 악기 등은 모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물품들이다. 기초 예체능 교육이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사실 준비물을 사 가는데도 몇 만 원 이상의 돈이 들 때도 많다. 준비물이 없으면 한 시간 내내 가만히 앉아 있거나 심지어 교실 뒤에 나가 벌을 서있는 등, 그 시기에 배워야 할 기초적인 학습을 놓치고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반 이상이 준비물 없이 앉아 있어서 수업을 하기 어려운 적도 있었다는 선생님은 망가진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급하다고 했다.

"준비물 없이 앉아 있는 아이들은 교사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학습 효율성도 떨어져요. 벌 받고 부진아 소리 듣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보면 준비물이 잘 안 갖춰지면서 생기는 결손이 크거든요. 학습 준비물 비용 같은 예산확보를 해서 무상 교육의 큰 틀을 짜야 합니다."

무상 교육의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무상급식은 파급력을 가질 것이고 그 범위는 교육의 전반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무상 급식이 전국으로 퍼져가는 걸 보면 그 파급력이 무상 교육 전반에까지 퍼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절실한 사람들이 자신이 서있는 자리에서 땅을 일굴 일이다. 그것이 무상 급식이든, 혁신 학교이든, 인권 조례 제정이든. 또 그가 교사이든, 농민이든, 학부모이든, 학생이든…지류는 큰 강에서 만나고 나무는 숲으로 우거질 것이다.

복지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해부한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들어가며

복지논쟁이 뜨겁다.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로 재미를 본 민주당은 '3+1정책'(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을 전면에 내세우며 복지 확대론을 펴고 있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과다한 복지정책이 세금폭탄이나 재정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의 복지 확대론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진정성과 현실성이 있는지 점검하기에 바쁘고,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이것이 일본과 남유럽식 재정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 글은 민주당의 무상복지론에 의해 촉발된 복지논쟁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 글에 포함된 여러 자료들이 복지논쟁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쟁점-1] 복지예산 사상최고치 경신, 의미 있는 주장인가?

(1) 정부와 여당의 주장

정부와 여당은 복지예산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며 국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2) 복지지출 사상 최고치 경신 주장의 허구성

그러나 1982년 이후 보건복지예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단 한 해도 없었다.

정부와 여당의 표현대로 하면 해마다 보건복지예산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외환위기가 몰아쳤던 1998년에도 그것은 9.2% 증가했다.

해마다 보건복지예산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국의 경제에서 실질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매우 드물고, 또 실질GDP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더더욱 드물며, 누진세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조세 세입 증가율이 경상GDP 상승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재정부도 평소 실질성장률이 5%이고, 물가상승률이 3%여서, 경상성장률이 8~9%로 나타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실질GDP 성장률이 0%를 기록한다 해도 물가상승률 3%가 있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은 3%를 유지하게 되고, 정부가 복지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을 연동시킬 경우, 즉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시킬 경우, 보건복지예산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지 않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1>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보건복지예산 변화 추이(단위: %)

연도	실질GDP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예산 증가율	보건복지예산 증가율	비고
1982	7.3	7.2	15.8	32.5	
1983	10.8	3.4	11.8	21.6	
1984	8.1	2.3	11.3	3.4	
1985	6.8	2.5	12.2	15.3	
1986	10.6	2.8	10.1	19.0	
1987	11.1	3.0	16.4	26.9	
1988	10.6	7.1	14.8	40.6	
1989	6.7	5.7	19.6	29.8	
1990	9.2	8.6	24.5	24.1	
1991	9.4	9.3	14.3	27.0	
1992	5.9	6.2	6.8	5.7	
1993	6.1	4.8	13.6	7.0	
1994	8.5	6.3	13.7	7.0	

1995	9.2	4.5	20.0	12.0	
1996	7.0	4.9	13.4	19.5	
1997	4.7	4.4	13.4	20.3	
1998	-6.9	7.5	13.3	9.2	
1999	9.5	0.8	10.7	33.7	
2000	8.5	2.3	6.0	27.6	
2001	4.0	4.1	11.8	40.5	
2002	7.2	2.8	10.5	3.9	
2003	2.8	3.5	7.8	9.7	
2004	4.6	3.6	1.7	8.6	
2005	4.0	2.8	12.5	-3.5(11.9)	지방이양+ 부처이관
2006	5.2	2.2	8.7	9.0	
2007	5.1	2.5	6.6	18.8	
2008	2.2	4.7	14.6	38.9	부처통합
2009			9.6	16.2	

(주) 2005년 예산증가율 감소 원인: 지방이양(67개 사업) 0.7조원, 보육사업 여성부 이관 등 0.5조원, 기금 이양 0.2조원(이 자료는 일반회계 기준)
(주) 2005년 괄호 안 수치는 지방이양, 부처이관, 기금이양 부분을 고려한 수치임
(주) 2009년과 2010년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본예산 기준)
(출처): 한국은행과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 가공

[쟁점-2] 우리나라 복지, 즐길만한 수준인가?

(1) 윤증현 장관의 주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를)즐겨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OECD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은 6.9%로 30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 심지어 7.4%인 멕시코보다 더 낮고, 세 번째로 낮은 터키(13.7%)보다는 6.8% 더 낮으며, 네 번째로 낮은 미국(15.9%)보다는 9% 더 낮다.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이 터키보다는 6.8% 더 낮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액이 터키보다 약 79조원 더 적다는 의미이고, 미국보다 9% 더 낮다는 말은 약 105조원 더 적다는 의미다.(2010년 우리나라 GDP는 약 1,162조원)

불행 중 다행이라면 2005년과 2007년 사이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멕시코 수준을 추월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표 2>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Australia	10.6	12.5	13.6	16.6	17.8	17.1
Austria	22.5	23.8	23.9	26.5	26.4	27.2
Belgium	23.5	26.0	24.9	26.2	25.3	26.4
Canada	13.7	17.0	18.1	18.9	16.5	16.5
Czech Republic	..	..	16.0	18.2	19.8	19.5
Denmark	24.8	23.2	25.1	28.9	25.8	27.1
Finland	18.0	22.5	24.2	30.9	24.3	26.1
France	20.8	26.0	25.1	28.6	27.9	29.2
Germany	22.7	23.2	22.3	26.5	26.2	26.7
Greece	10.2	16.0	16.5	17.3	19.2	20.5
Hungary	..	..	..	..	20.0	22.5
Iceland	..	..	13.7	15.2	15.3	16.9
Ireland	16.7	21.3	14.9	15.7	13.6	16.7
Italy	18.0	20.8	20.0	19.9	23.3	25.0
Japan	10.6	11.4	11.4	14.3	16.5	18.6
Korea	..	..	2.9	3.3	5.0	6.9

Luxembourg	20.6	20.2	19.1	20.8	19.7	23.2
Mexico	..	1.9	3.6	4.7	5.8	7.4
Netherlands	24.8	25.3	25.6	23.8	19.8	20.9
New Zealand	17.2	17.9	21.8	18.9	19.4	18.5
Norway	16.9	17.8	22.3	23.3	21.3	21.6
Poland	..	..	14.9	22.6	20.5	21.0
Portugal	10.2	10.4	12.9	17.0	19.6	..
Slovak Republic	..	..	..	18.6	17.9	16.6
Spain	15.5	17.8	19.9	21.4	20.3	21.2
Sweden	27.1	29.4	30.2	32.1	28.5	29.4
Switzerland	13.5	14.5	13.4	17.5	17.9	20.3
Turkey	4.3	4.2	7.6	7.5	..	13.7
United Kingdom	16.7	19.8	17.0	20.2	19.2	21.3
United States	13.1	13.1	13.4	15.3	14.5	15.9
OECD - Total	16.0	17.7	18.1	19.9	19.3	20.6

(자료): OECD

[쟁점-3] 경제수준에 걸맞은 복지란 어느 수준을 말하는가?

(1)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수준에 걸맞은 복지를 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등을 할 경우 재정 위기가 올 것이라 주장했다.

(2) 경제수준에 걸맞은 복지수준

OECD의 33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10개국과 비교해 보면 2009년 이들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은 29.8%로 우리나라(25.6%)보

다 4.2% 높고,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율은 15.6%로 우리나라(7.5%)보다 8.1% 높다.

<표 3>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의 조세부담율과 공공복지지출 비중

국가	1인당 GDP (미 달러)	조세부담율(%)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비율(%)
Mexico	8,134	17.5	7.2
Turkey	8,711	24.6	10.5
Chile	9,516	18.2	10.6
Poland	11,302	34.3	20.0
Hungary	12,914	39.1	23.1
Slovak Republic	16,282	29.3	15.7
Korea	17,074	25.6	7.5
Czech Republic	18,256	34.8	18.8
Portugal	21,970	35.2	22.5
Slovenia	24,111	37.9	20.3
Israel	26,874	31.4	15.5
평균	15,922	29.8	15.6

(자료): OECD, IMF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수준이 비슷한 10개국들보다 49조원 세금을 덜 내고 있고, 94조원 복지혜택을 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11년 우리나라 경상 GDP는 1,162조원)

따라서 경제수준에 걸맞은 복지국가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일차로 조세부담액을 49조원 늘리고, 지출조정을 통해 45조원을 확보하여, 복지 지출액이 94조원에 달하도록 해야 한다.

[쟁점-4] 우리나라 복지수준, 좋아지고 있나, 퇴행하고 있나?

(1) 여당과 정부의 주장

여당과 정부는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감세논란, 재정건전성 논란 속에서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우리나라 복지수준, 퇴행하고 있다.

정부가 평소 주장했던 것처럼 실질성장률이 5%이고, 물가상승률이 3%여서, 재정수입 증가율이 8~9%로 나타난다면, 복지예산도 연간 8% 정도 증가해야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11년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총수입이 2010년 대비 8.2% 증가한 314.6조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국세수입은 10.2% 증가할 것이라 전망)

<표 4> 재정부의 2011년도 세입예산안 (조원, %)

	2010예산 (A)	2011(안) (B)	증가율(B/A)
총수입	290.8	314.6	8.2
예산	194.8	212.3	9.0
국세	170.5	187.8	10.2
세외수입	24.3	24.5	0.6
기금	96.0	102.3	6.5

(자료) : 재정부

그러나 정부는 또 2011년 총지출 예산을 2010년 대비 5.7% 증가한 309.6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하고, 이중 복지예산은 6.2% 증가할 것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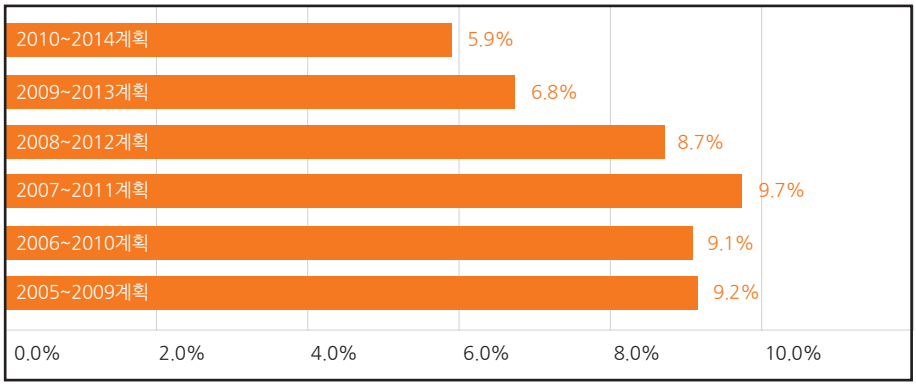
<표 5> 정부 총지출과 복지 총지출(단위: 조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0년 대비 증가율
정부총지출	237.1	262.8	284.5	292.8	309.6	5.7%
복지총지출	61.4	67.6	74.6	81.2	86.3	6.2%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의 주장처럼 2011년도 실질성장률이 5%, 물가상승률이 3%, 경상성장률이 8%로 나타났음에도, 복지예산 증가율이 6.2%에 그칠 경우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현재의 수준에서 크게 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가 2010년 10월 발표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4년간의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정 연평균 증가율을 5.9%로 책정하고 있어 앞으로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퇴행할 전망이다.



<그림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정 연평균 증가율(기획재정부 자료)

[쟁점-5]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인가?

(1)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일컬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규정한다.

(2)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8년 발표한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청소년 복지재정 비율은 0.1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이는 OECD 평균 1.50%의 1/8 수준에 해당한다. 그나마 2006년 이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힘입어 그 비율이 0.30%(2008년 기준)로 올라가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은 저출산 문제를 걱정한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는 법.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복지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 다만 현금급여를 늘릴 경우 사교육비로 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같은 현물급여를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

오시장은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그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재정이 OECD 평균수준에 비해 약 12조원(GDP의 1.2%) 정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의 74%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OECD 평균수준과의 격차는 약 8조원(GDP의 0.8%)이 된다.
선진국에 비해 아동·청소년 복지재정이 8조원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2조원정도 재정을 추가로 확보한다 하여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더구나 그 재원을 증세가 아닌 토목비 비중 축소로 마련하는 것이라면 이에 반대할 명분은 더욱더 궁색해진다.

[쟁점-6] 토목사업과 복지사업 중, 어느 것이 포퓰리즘에 가깝나?

(1)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무상복지는 망국적 포퓰리즘이지만 "한강변 자전거길, 산책길은 입장료가 없고, 소득계층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전형"이라며 후자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드러냈다.
또 그는 지난해 5월 18일 MBC 서울시장 후보토론회에서 "건설비를 쓰는 것은 한시적이나 보육이나 복지 예산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낮출 수가 없다"며 토목 중심의 자신의 정책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2) 토목사업과 복지사업의 효율성 비교
토목사업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그 생산성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1인당 GDP가 매우 적은 반면, 기름 값이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GDP 대비 물류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따라 물류비가 급증하는 이

들 나라의 경우 SOC 건설[1]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된다. 그러나 경제가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이 급감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SOC 건설 사업은 약(藥)이 아니라 독(毒)이 될 수 있다. 물류비를 대폭 줄여주지 못하는 SOC 사업은 생산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 산업과 건설업의 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액 대비 부가가치액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58.1%, 후자는 35.1%로 나타난다. 물류비를 대폭 줄여주지 못하는 SOC 사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증거다.

반면 복지사업은 전 산업의 소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물류비를 대폭 줄여주지 못하는 SOC 사업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 특히 교육복지사업은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생산성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수준에서는 생산성 낮은 토목사업을 선호하는 오 시장이 교육복지사업을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더 포퓰리스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과다한 토목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1990년대 일본의 실패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90년대 북유럽과 일본은 유사한 부동산거품 붕괴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거품붕괴위기에 대처하는 두 지역의 전략은 사뭇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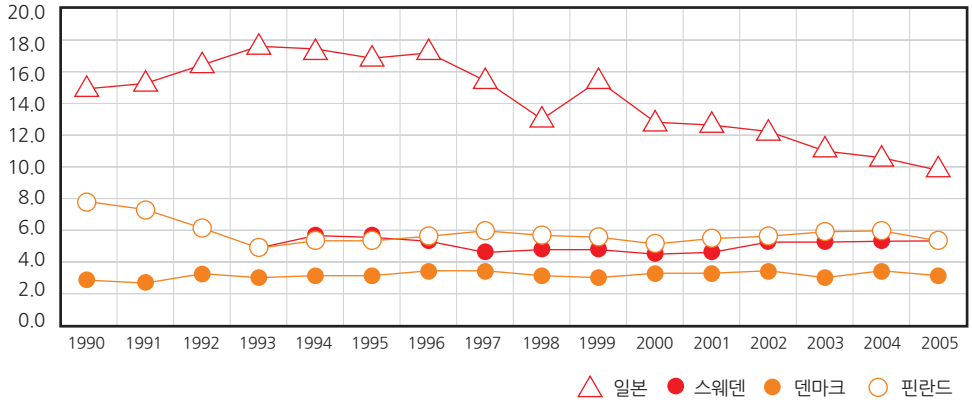
일본이 토목건설형 경기부양에 집중한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개혁과 복지확충에 집중했다. 당시 북유럽 국가들은 △실사구시형 대학개혁 △양질의 직업교육·직업훈련 △국민들의 미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충실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위기를 고성장의 기회로 만들었다. 그 결과 1994년과 2006년 사이 일본의 일자리가 0.6% 줄어들 때 이들 국가들의 일자리는 평균 20%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일본은 토목사업과 복지사업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당국 모두 토목건설예산 비중을 줄이고 교육·복지 예산 비중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1990년대 일본정부가 토목건설형 경기부양에 집중한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이와 다른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1997년 이후 일본정부의 태도다. 일본 정부는 토목건설 중심형 경기부양정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는 국내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토목 예산 비중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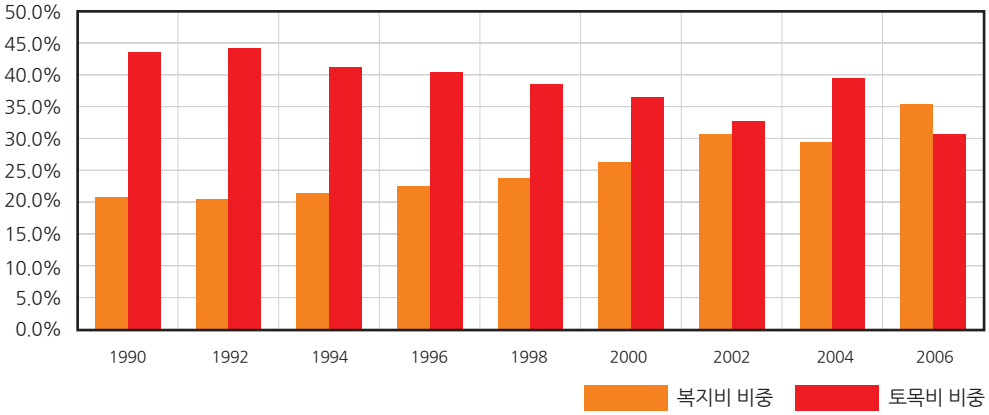
---

1 SOC(Social Overhead Capital)건설: 사회간접자본 건설, 즉 국가기반시설이나 공공 건설사업을 일컫는 말.(편집자 주)



<그림2> 정부지출총액 대비 정부의 건설투자액 비중(%)
(출처): OECD 자료를 가공

지방정부들은 어떨까. 일본 지자체들도 중앙정부와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1990년대 토목중심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실패한 일본 지자체들은 2000년 이후 토목지출 비중을 대폭 줄이고 복지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방정부 복지비 비중은 2000년 25.1%에서 2006년 35.1%로 10.0% 상승한 반면, 토목비 비중은 36.9%에서 30.0%로 6.9%하락했다.



<그림3> 일본 지방정부의 민생복지비, 토목비 비중 변화 추이
(출처): 일본 총무성 자료 재구성

맺음말

이 외에도 오세훈 시장은 일본의 재정위기가 최근 집권한 민주당의 아동복지 확대정책 때문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주장을 하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심화된 일본 재정위기의 원인을 최근 1~2년 사이의 정책변화에서 찾는 것은 정당하다 볼 수 없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990년대 초 70% 내외에서 2000년대 초 140%로 늘었고 최근에는 200%에 근접했는데, 그 원인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다. 굳이 그 주요 요인을 추려 본다면 부동산 거품 붕괴, 부자들에 대한 누진세 감세, 토목공사 중심형 경기부양책, 장기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부자들에 대한 누진세 감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990년대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OECD에 따르면 1990년 일본의 GDP대비 소득세 비중은 8.1%였으나 2007년에 5.5%로 하락했다. 무려 2.6% 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GDP 대비 2.6% 포인트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수준(GDP 1162조원)에 비추어 보면 30조원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최근의 복지논쟁과 관련된 쟁점들은 매우 많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이 글에서는 이 정도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이 글이 최근의 복지논쟁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하고, 보다 더 객관적 근거에 충실한 것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조합원 활동가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원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1. 들어가면서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는 활동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활동가라 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환경운동 단체에 회비를 내는 회원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활동가라 부른다. 활동가들은 오염 배출 사업장 감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반대, 멸종 위기 동물의 보호 등을 위해 몸으로 참여한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가들의 활동이 있어 상근 실무자가 몇 명 되지 않아도 활동을 할 수 있다.

생협에도 이런 활동가들이 있다. 그러나 일반 자본기업에는 없다. 아이쿱생협의 활동가들은 마을지기, 동아리지기, 각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생협에는 왜 이런 활동가들이 있으며 그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활동가들이 더욱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 생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010년 8월, 아이쿱생협연합회에서는 '조합원활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내용을 조사, 연구하였다. 위원회에서 논의 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함께 정리하였다.

2. 조합원의 활동이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생협에 있는 조합원과 활동가라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어떠한 특성이 활동가를 존재하게 하는지와 협동조합의 전통에서 조합원과 활동가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자.

1) 사업과 활동의 유기적인 결합체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엔터프라이즈(enterprise)라는 사업체의 성격과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이라는 결사체의 성격을 함께 가진 조직이다.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것이 협동조합을 자본 기업이나 국가, 일반 NGO와 구분케 하는 특징이다. 자본 기업은 생산하고 판매 또는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의 기능만 하고, 일반 NGO는 자

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사체의 기능을 주로 한다. 국가는 공기업을 통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의 사업을 한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는 조직이지만 자본이 중심인 자본기업, 중요한 결정을 국가가 하는 공기업 등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조직이다.

2) 조합원을 기반으로 한 인적구성체 생협

협동조합, 생협이 사업체이자 결사체인 것은 조직 자체의 특성이자 역사적 전통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생협의 규모가 커지고 자본 기업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업에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엔터프라이즈 성격의 사업은 전문 경영인과 직원이 중심이 되어 하고, 어소시에이션 성격의 활동은 조합원들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 사업체로서 일상적인 경영과 운영은 경영진과 직원이 하고 총회를 비롯한 최종 의사 결정은 어소시에이션으로 조합원이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어소시에이션 총회에서 최종 승인 받는다. 총회에서 결정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돈을 출자했는가와 관계없이 모두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므로 어소시에이션이다. 주식회사의 총회는 아무리 절차를 잘 지켜 진행한다 해도 민주적인 조직, 민주적인 결정이라 표현하지 않는다. 자본 기업은 1인 1표가 아닌 1원 1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결정하고 선거는 평등권 즉, 1인 1표를 전제로 한다.

3. 협동조합, 생협 내부의 각 그룹에 대한 이해

자본 기업은 노동자, 소비자, 거래하는 공급자와 관계를 파트너십이나 배려보다는 주주들에게 최대 이윤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그러나 생협은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인적구성체이고 사업의 목적이 '다양한 조합원의 욕구 해결'이므로 자본 기업의 일사불란한 체계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협동조합, 생협에 참여하는 다양한 그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존재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욕구 실현에서 출발하는 사업체인데 조합원의 욕구는 다양하다. 그리고 사업에는 조합원, 직원,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 이해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자협동조합(생협)에서 이해 관계자는 출자한 소비자조합원과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생산자, 그리고 업무를 하는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2) 생협 내부의 그룹

생협의 이해 관계자로는 출자한 소비자조합원,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생산자 그리고 생협의 일을 하는 직원 등이 있다. 그런데 생산자 또는 공급자는 생협 내부의 그룹이라기보다는 생협과 거래하는 파트너 또는 거래자다. 물론 생산자, 공급자가 생협에서 출자한 자회사일 경우에는 내부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아이쿱생협연대는 생산자를 내부 그룹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생협연대의 회원으로 만들었으나 2010년 개정된 생협법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산자를 내부 그룹으로 하기 위해 아이쿱생산자회를 만들었고 서로 이해와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활동가와 직원

1) 노동의 범주

노동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정의 중에서 크게 세 가지 범주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노동을 가장 크게 정의하는 관점 즉, 인간이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모든 행위를 노동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 행위와 연관된 것만을 노동으로 보는 것인데 이 경제 활동은 임금이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의식주 등을 위한 행위 중에서도 가족생활에 필요한 양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하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 세 가지 시각에 대해 다양한 논쟁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 번째 관점 즉, 생계를 위해 임금이나 대가를 받는 경제 활동을 노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활동에 대한 개념

활동은 자본 기업에는 없는 개념이다. 생협은 소비자 조합원이 생협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비조합원 또는 조합원에게 홍보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인다. 사업과 관계된 활동만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그 받은 내용을 다른 조합원 또는 일반에게 전파한다. 그 외에 민주주의 확산, 지방자치 정착, 지역사회의 활성화 등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조합원 활동이다. 즉, 생협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조합원, 활동가들이 움직이는 모든 행위를 활동으로 볼 수 있다.

3) 생협에서 활동가의 활동과 직원의 노동

활동가의 활동은 직원의 노동과 달리 접근해야 한다.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능한 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협에서 활동가의 활동은 경제적 보상의 개

념보다 조합원으로서 주권 실현과 민주적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반면 직원의 노동은 대한 경제적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활동가와 직원의 역할은 균형이 잡히고 상호 존중과 견제가 가능하다.

4) 활동가와 직원의 역할 분담

생협은 직업으로 전문성을 갖는 직원과 자원 활동을 하는 조합원 활동가에 의해 움직인다. 활동가 중에는 총회에서 선출되어 정관이 부여한 임기 동안 전체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는 활동가와 이사회에서 위촉하거나 승인한 활동가들이 있다. 초기의 활동은 대부분 선출이 아닌 비선출 활동에서 시작한다. 활동가와 직원은 생협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양자 간에 협력을 전제로 하면서 균형과 견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의 표는 활동가와 직원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활동가와 직원의 역할과 권한>

	활동가	직원
선임 방식	총회 선출, 이사회 위촉이나 승인	이사장 또는 경영진이 채용
권한 부여	정관과 총회가 부여 또는 이사회가 위임	이사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부여
권한	총회,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	이사회에서 주어진 역할 집행, 수행
책임	사업과 활동에 대한 최종 책임	주어진 업무 내에서 책임
인센티브	사회적(또는 정치적) 지원 중요	경제적 보상과 인사가 중심
임기	정관에 따른 임기와 위촉 기간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역할	대내외의 대표성	일상 업무를 통한 사업의 수행
성격	어소시에이션 중심으로 활동	엔터프라이즈로서 사업
최종 지위	이사, 의장(chair man) 또는 이사장	경영진, management, CEO

위 표에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최종 지위다. 최종 지위에서 이사장과 경영진(단위생협의 상임이사)을 누가 맡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는 각 나라, 생협별로 차이가 있다. 이사장을 직원 출신이 맡는 경우(일본의 많은 생협들, 한국의 일부 생협)도 있고 조합원 활

동가 출신(영국, 이탈리아생협, 아이쿱생협)이 맡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른 장단점은 이후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이쿱생협의 일부 단위 생협과 같이 초기 규모가 작을 때에는 경영 책임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이사장이 책임진다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어야 한다. 이사장 한 사람에게 조직의 대표, 활동, 경영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적 성과인 임금적 보상과 조직의 대표성 그리고 경영적 판단 모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일은 협동조합적이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대표성과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적정한 규모가 되면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를 활동가나 직원 내에서 정하여 역할을 하게 된다. 직원 중에서 경영자가 나올 경우 직원은 더 이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이사회(장)과 고용계약을 해야 한다.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직원으로 안정된 보장을 벗어나 경영의 성과로 이사회로부터 평가 받는 위치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경영자(실무책임자)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협동조합, 생협에서 활동가와 직원의 권한과 책임은 협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균형과 견제도 함께 있어야 한다.

5. 왜 조합원 활동가가 중요한가?

1) 경영 영역에서 직원 역할이 커지는 현상

유럽이나 일본의 생협 역사를 보거나 현재 한국의 추세를 보면 생협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커지면 경영 영역에서 직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직원의 영향력, 역할이 커질수록 활동가들의 활동이 더욱 커지고 강화되어야 한다. 직원의 역할은 커지는데 활동가의 역할은 정체되어 있으면, 지역생협 또는 단위생협의 선출직 이사장을 뽑을 때 활동가가 아닌 직원이 선출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사례는 주로 일본에서 있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생협에서 나타나고 있다.

2) 직원이 조직의 대표가 될 때 발생하는 문제

조합원 활동가가 아닌 직원이 조합의 대표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생협에 대한 기본 만족은 유지되면서 조합원은 사라지고 고객 또는 소비자만 남는 사업 중심 구조가 될 수 있다. 사업 중심의 고객만 남는 상황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첫째,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부실해지면 부패가 커질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의 삿뽀로시민생협 경영진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물론 반대로 이사장에게

권력이 집중될 때에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이즈미생협과 같이 이사장이 생협을 사유화하는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둘째, 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한국 생협은 1980년대 중후반 생산자의 영향 속에서 출발했다. 그로 인해 소비자 조합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생협에서 있었던 사례와 같이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와 담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3) 활동가 영역의 중요성

조합원 활동가의 활동이 중요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조합원이 가져야, 경영진의 일상적인 경영 판단과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공과 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유럽의 생협은 생산-소비 관계의 사회적 관계 변화를 도모하는 게 중요한 목표인데, 이를 실현할 주체는 조합원 활동가다. 생협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 중에서 조합원, 활동가들의 참여와 결의의 확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6. 활동가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기 위한 지원

지금까지 협동조합, 생협에서 노동과 활동의 차이, 조합원과 활동가의 중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활동가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에는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정치적 지원 등의 방법이 있다.

1)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에는 활동을 하는데 발생하는 교통비, 회의비, 식비 등을 활동비 명목으로 실비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2) 사회적 지원

먼저 임파워먼트 즉, 활동가의 자기 개발을 통한 권한부여가 필요하다. 생협의 주권이 조합원에게 있음을 인식하도록 교육 훈련하여 조합원, 활동가로서 권한을 다 발휘하도록 한다.

3) 정치적 지원

생협 조합원들의 요구가 지역 사회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가령 예를 들어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이 무상으로 제공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7. 활동 지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들

1) 개념에 대한 정리

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해 보상이 아닌 지원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보상의 측면으로 다가간다면 임금으로 연결되기 쉽고, 임금으로 연결되었을 때에는 직원의 노동과 활동가의 활동이 혼재되어 각자의 역할에 혼란과 한계를 가져온다.

2) 활동에 대한 지원 방법과 규모를 정할 때 참여

활동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정하는 데, 그 금액이나 규모도 중요하지만, 논의 과정에 조합원들이 얼마나 참여하여 동의했느냐가 중요하다.

3) 문서화되지 않은 활동에 대한 지원

이사, 위원장 등 권한과 책임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문서화 되어 있다. 그러나 비선출 활동가의 경우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활동비 등을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

4)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생협 물품 등과 같은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그리고 경력, 이력을 누적하는 마일리지(또는 footprint/ 발자국)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5) 비전은 단계별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적절한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활동가부터 20, 30년 또는 그 이상 활동을 한 활동가까지 적절한 단계로 구분을 하여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협 운동은 평생, 더 나아가 세대를 이어서 하는 운동이다. 즉, 우리 세대에 이루지 못한 협동조합의 가치와 전망을 다음

세대에 이어서 실천하는 운동인 것이다.

8. 어떤 활동들을 인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1) 활동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

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활동: 활동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협동이라는 의미 자체와 협동조합의 가치에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② 생협에서 책임을 맡는 활동: 정관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 감사,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사회에서 위촉한 위원장, 위원, 마을지기, 동아리지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등을 맡아서 책임 있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

③ 지역생협에서 펼치는 활동: 총회, 교육, 캠페인, 홍보 활동 그리고 기부금 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

④ 생협 외의 활동에 대한 인정: 지역생협 내부 활동을 우선 인정하면서 지역생협이 주축이 되어 하는 지역 사회 아동 센터, 독거노인, 장애우 시설 등에 대해 인정한다.

2)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① 실비 지원: 지역생협의 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은 각 지역생협의 사정에 따라 현재도 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나 상태나 적자 상태인 생협은 지원을 못할 수도 있고, 적자를 각오하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금의 개념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한다.

② 포인트 지원(또는 세츠): 생협의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지역생협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도 임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포인트 지원은 소모되는 개념이다.

③ 마일리지(또는 풋프린트, 활동 이력 발자국, 활동 누적제): 문화, 교육, 연수, 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며 원칙이 필요하다. 소모되지 않고 누적되는 개념이며 일종의 자격의 의미로 쓰인다.

3) 마일리지 부여에 대한 원칙

① 평등성: 평등성은 두 가지에서 필요하다. 하나는 모든 단위생협의 평등성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활동가의 평등성이다. 마일리지의 경우 모든 단위생협이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캠페인에 똑같이 참여했다면 이사장이나 조합원이나 모두 똑같은 활동가

로서 부여되어야 한다.

② 형평성: '10회 참여한 사람에게는 10마일리지, 1회 참여한 사람에게는 1마일리지'와 같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시간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부여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③ 책임에 대한 배려: 평등성에서는 이사장과 조합원 모두 같지만, 이사장, 이사 등이 정관에 따른 임기를 마쳤을 때는 그 기간에 대해 마일리지를 인정한다. 단, 임기 도중에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4) 마일리지를 인정하고 부여하는 절차와 기관

① 문서화된 기준의 필요: 우선 다양한 참여와 논의 속에서 어떤 활동을 인정하고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기준이 되는 것을 정한다.

② 단위생협 이사회의 추천과 보고: 1차로 단위생협의 이사회에서 행위에 대해 인정한다. 지역생협 이사회가 가장 잘 알 수 있으므로 활동에 대해서 추천한다.

③ 연합 조직 이사회가 승인한 조직: 단위생협에서 부여하면 평등성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므로 연합 조직에서 최종 인정하여 부여한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승인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5) 쌓인 마일리지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일리지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활동의 지속성에 기여: 활동가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다녀와서 계속 활동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활동가들의 자부심: 쌓인 마일리지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에, 활동가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활동가들의 성장을 돕는 것: 활동가들이 내면의 인격 성숙이나 지식, 지혜 축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실사구시적인 것: 가능하면 생협 활동 또는 지역 사회 활동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6) 어떤 것들이 있나?

① 교육, 훈련, 연수: 협동조합의 원칙에도 있듯이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합원 활동가들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연수를 단계별로, 다양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한다.

② 문화, 여행: 문화는 노동에 지친 인간이 휴식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영감을 주는 샘물이다. 그러므로 활동가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유와 기회가 필요하다. 여행을 할 때에는 공정여행과 연계하여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도록 한다.

③ 건강, 의료, 복지, 실버노동 등: 지역 의료기관(가능하면 의료생협)과 연계한 종합검진, 산부인과 검진 등을 고려하면 좋다. 활동가들이 남편이나 본인이 은퇴한 후 적절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갈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④ 자녀와 관련된 내용: 중고등학교 입학 시 축하 선물, 어린이 캠프 프로그램 지원(YMCA 등 단체 연계 활용), 자녀의 생협 취업 시 가산점 부여 기준도 논의하는 것이 좋다.

⑤ 생활 정치 참여: 생협 활동은 지역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지며, 시장화하려는 세력과 일정한 영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에서 생활 영역에서 정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생활 정치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아이쿱 생협만평

이 동 수

SSM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친서민 대 친대기업으로 양분되는 보도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얼마 전 제가 일하고 있는 대학로에도 하룻밤 사이에 '롯데마이슈퍼'가 생겼는데요. 공사중이라는 현수막 아래에 원래 있었던 피자가게를 리모델링하는 줄 알았더니 '롯데마이슈퍼'가 기습적으로 개점한 것입니다. 바로 옆에 '럭키할인마트'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럭키마트'는 '롯데마이슈퍼'의 개점 전날 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고 이후 매출이 25%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SSM의 등장이 지역의 소상인들과 인접한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출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상생법 늑장처리, 몰락해가는 지역 중소상인

2010년에는 대기업 소유의 유통업체들이 SSM(기업형수퍼마켓, Super Super Market)을 확장하여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동 없는 SSM의 확장이 중소 자영업자들을 몰락시켜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한 편에서는 SSM의 등장으로 자영업자는 몰락할지 모르지만 대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마저도 최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일 뿐이다. 또 대형마트와 SSM의 수익은 대부분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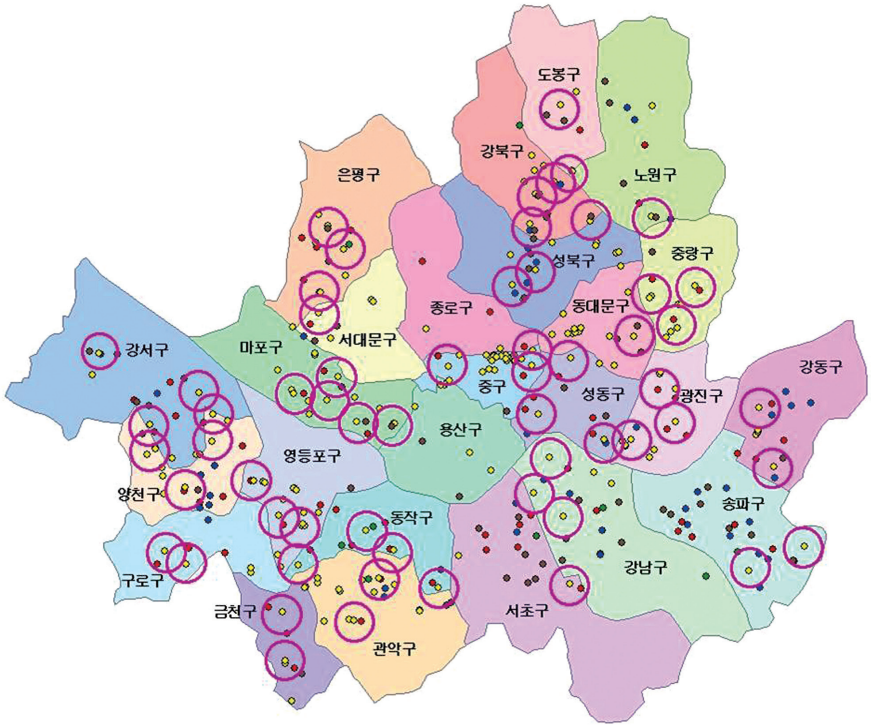
사실 소비자들은 SSM의 확장이 값싼 제품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소규모 유통이 사라지고 대형마트와 SSM으로 재편되고 나면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09년 중

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보다 전통 시장을 이용할 경우 추석 차례상 비용이 24.6%나 적게 든 걸로 나타났다. 하나의 사례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제공하는 가격이 반드시 싼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확장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2010년 11월, 이른바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정지 권고 등 규제가 가능한 사업조정제의 적용 대상이 되자 대기업 유통업체는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포 사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상생법 개정안은 이에 대응하여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는 2011년 2월 18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라는 성명을 냈다. 하루 12시간 이하로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미 대기업 유통 자본들은 2007년부터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등 SSM을 경쟁적으로 설립해 그 수가 800개를 넘어섰고,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소형 슈퍼마켓 수가 2005년에 비해 2만개 가량 줄어 7만 9200여 개가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중소 자영업자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 SSM 인근 슈퍼의 매출액이 평균 48%나 줄고, 자영업자 80%가 월수 100만 원 이하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상생법의 통과가 매우 시급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상생법과 짝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식의 순차 처리를 주장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상생법은 늑장 통과 되었다.

상생법이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서울시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전통시장과 SSM의 현황을 알기 위해 25개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1]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몰락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그림 1>에서 보듯 전통시장과 SSM이 인접한 50 여 개의 지역(원 안, 빈 동그라미가 SSM)은 주로 아파트 단지처럼 인구 밀집지역에 몰려 있다.

1 한겨레가 주최한 정보공개 캠페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태옥의 'SSM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참조: http://www.opengirok.or.kr/2207)



<그림1> 서울시 전통시장과 SSM의 현황

SSM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겨레, 경향

전통시장이 모두 몰락해서 상생법의 실효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정도로 법 개정이 늑장을 부리는 동안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비판, 감시하고 여론을 대변해야 하는 언론은 무엇을 했을까?

시민 언론운동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사[2] 에 따르면 신문들의 성향에 따라 SSM 확장 규제에 대한 시각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SSM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SSM의 이익을 적극 옹호했다.

한겨레나 경향은 중소자영업자인 서민을, 조중동은 대기업을 옹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SSM과 지역상권의 갈등 문제를 취급하는 건수부터 차이가 난다. 기사의 건수는 각 신문이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지표라 할 것이다.

---

2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홍보 책자 '동네슈퍼아저씨는 꼭 봐야 할 책' 참조, 이후 표는 이 책을 참조하였음

<표 1> 2009년 9월 1일 ~ 9월 30일, 주요 일간지 SSM 관련 보도량 (단위 : 건)

	한겨레	경향	조선	중앙	동아
기사 건수	64	38	13	19	22
사설 건수	6	4			

<표 1>에서 보듯 한겨레, 경향과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은 기사 건수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사설의 경우는 한겨레, 경향과 달리 조중동은 한 번도 취급하지 않았다. 사설은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언론의 시각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조중동은 적어도 조사 시기 동안 SSM의 사업 확장을 주요한 현안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전국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관련한 사안을 주요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조중동이 서민의 이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다.

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한겨레나 경향의 경우 정부 여당의 SSM 규제가 지연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SSM의 횡포를 지적하거나 규제를 요구하는 것, 중소기업청이나 지자체라도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거나 사업조정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다. 반면 조중동의 경우 동아일보가 정부 여당의 SSM 규제 지연에 대해 한 번, SSM의 횡포·폐해에 대해 한 번 비판한 것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표 2> 2009년 9월 1일~2010년 9월 30일, 주요 일간지 SSM 관련 기사 분류

	한겨레	경향	조선	중앙	동아
SSM 규제 요구	6	7			
SSM 횡포·폐해	7	6			1
정부·여당 SSM 규제 지연 비판	20	4			1
재래시장 가격 경쟁력	2	2			1
중소상인들의 요구 움직임	8	6			
SSM 동정	3	1	5	2	3
중소기업청·지자체 등의 지원·조정	13	9	2	5	6
SSM-중소상인 상생		1			2
SSM·대형마트의 어려움			2		2

SSM의 긍정성			1	3	2
SSM과 소비자의 권리				3	1
동네슈퍼의 서비스개선 필요성				2	
SSM-중소상인의 갈등				1	
SSM 규제법안 내용 단순 전달			2	1	
기타	5	2	1	2	3
계	64	38	13	19	22

또 한겨레, 경향은 조중동과 달리 사설을 통해 SSM의 규제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다. <표 3>,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제목만 봐도 중소상인들의 절박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미온적 대책을 비판하는 것들이다. 특히 정부가 법안 처리를 하기 어렵다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WTO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옳지 않음을 지적한 한겨레 사설이 돋보인다.(2010년 2월 23일 자 사설)

사실 WTO 협정 위반 주장은 외교통상부의 경제 관료들이 공익 정책에 반대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쓰는 수단이다. 하지만 WTO는 국제 무역 관련 협약이지 국내 공공 정책 규제 협약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을 규제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하는 법 규정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가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라서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내 기업인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외국기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SSM 규제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표 3> 2009년 9월 1일 ~ 2010년 9월 30일, 한겨레신문의 SSM 관련 사설 목록

사설제목	날짜
〈대형마트와 SSM 규제, 언제까지 미룰 건가〉	2010.02.23
〈정부.여당은 중소상인들을 그만 농락하라〉	2010.04.20
〈SSM 입점 제한법,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2010.06.19
〈대기업이 먼저 변해야 상생협력 이뤄진다〉	2010.08.06

<인천시 노력 돋보이나, 국회가 나서야 SSM 분쟁 끝난다>	2010.09.04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말만으로는 안 된다>	2010.09.14

한겨레도 지적했지만 경향신문이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한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집권 초기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공공연히 밝힌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책의 결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서민들의 불만이 급등하자 '친서민'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경향은 몰락해 가는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노력 없이 '친서민'을 외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다.(2010년 7월 20일자 사설)

<표 4> 2009년 9월 1일 ~ 2010년 9월 30일, 경향신문의 SSM 관련 사설 목록

사설제목	날짜
<효과 의심스러운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09.10.01
<정부의 재래시장 살리기 진정성 있나>	2009.10.05
<SSM 규제 손 놓고 무슨 친서민 인가>	2010.07.20
<대기업에 따뜻한 마음 주문한다고 될 일인가>	2010.08.13

비록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SSM의 입점을 자제시키는 권고를 하거나, 행정단속을 통해 막으려 노력해왔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니 전국 차원의 법적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것이 이들 언론의 일관된 주장이다.

SSM 규제로 어려워질 대형유통업체를 걱정하는 조중동

하지만 동일한 시기, 동일한 장소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조중동은 달랐다. 전술한 바와 같이 SSM 입점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몰락에 눈을 감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입점이 지연됨으로써 기업 운용의 어려움에 처한 대형 유통업체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이들 신문의 대형유통업체 편들기는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위기를 강조하는 것, 대형유통업체의 가맹점 확대 추진을 '상생노력'이라고 부각시키는 것, 소비자의 권리 주장 앞세워 SSM 입점을 정당화하는 것, 그리고 상인들의 규제 호소를 무리한 요구로 몰아세우는 것 등이다.

동아일보는 중소상인이 몰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도 대형마트의 위기 상황을 강

조하면서 간접적으로 SSM 확장을 옹호하였다.(그림2) 점포수가 늘지 않아 경영 위기에 봉착하고, SSM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중소 상인들의 반발로 위기에 봉착했다는 논리다. 합리적 경영을 통한 성장 대신 매장 확장을 통한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중소 상인을 몰락시키는 대형 유통업체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들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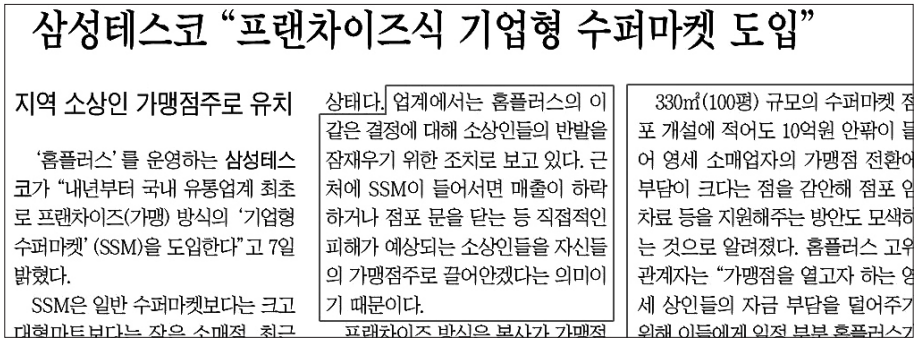
신규점포 줄며 매출 제자리-- 온라인 쇼핑의 도전-- 새 동력 SSM 진출 난항--

'위기의 대형마트' 탈출구 어디에…

온라인 매장 경쟁력 강화

<그림2> 대형마트 위기 강조하는 동아일보(2009년 10월 5일자 b3면)

한편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SSM 확장이 어려워지자 가맹점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대형 유통업체의 전략을 긍정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그림 3) 조선일보는 삼성테스코 관계자의 입을 빌어 가맹점형 SSM을 소개하면서 소상인과 상생형이 될 것이라 은근히 강조한다. 하지만 참여 가능한 일부 소상인들과 달리 참여하지 못하고 몰락해가는 대다수 중소상인들의 반응은 다루지 않아 반론권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저널리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삼성테스코 "프랜차이즈식 기업형 수퍼마켓 도입"

지역 소상인 가맹점주로 유치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가 "내년부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프랜차이즈(가맹) 방식의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SSM은 일반 수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소매점. 최근

상태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소상인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근처에 SSM이 들어서면 매출이 하락하거나 점포 문을 닫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인들을 자신들의 가맹점주로 끌어안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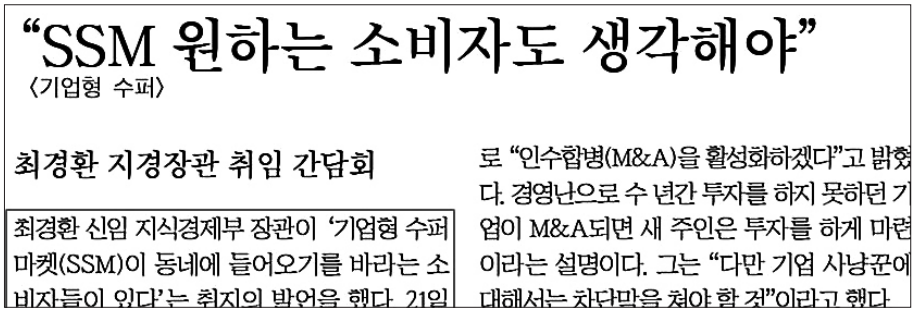
프랜차이즈 방식은 본사가 가맹점

330㎡(100평) 규모의 수퍼마켓 점포 개설에 적어도 10억원 안팎이 들어 영세 소매업자의 가맹점 전환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점포 임차료 등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가맹점을 열고자 하는 영세 상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게 일정 보분 홈플러스가

<그림3> 대형유통업체 의견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조선일보(2009년 12월 8일자 e3면)

중앙일보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여과 없이 소개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웠다.(그림 4) 단기적으로 보면 SSM의 등장은 소비자의 이익일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독과점 가격으로 손해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소비자 고발>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묶음 상품이 단위 상품에 비해 비싼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고 한다. 가격 착시 현상을 이용한 상술이다. SSM의 미래를 예측케 하는 한 사례다. 더구나 SSM의 소비자 대부분은 중소상인과 같은 또 다른 분야의 서민일 뿐이다. 이들 역시 또 다른 분야에서 SSM과 같은 대기업의 확장 정책에 의해 몰락하고, 저임금의 비정규노동자로 몰락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임을 무시하고 소비자의 권리만 앞세워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SSM 원하는 소비자도 생각해야"
〈기업형 수퍼〉

최경환 지경장관 취임 간담회

최경환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이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동네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1일

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영난으로 수 년간 투자를 하지 못하던 기업이 M&A되면 새 주인은 투자를 하게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기업 사냥꾼에 대해서는 차단막을 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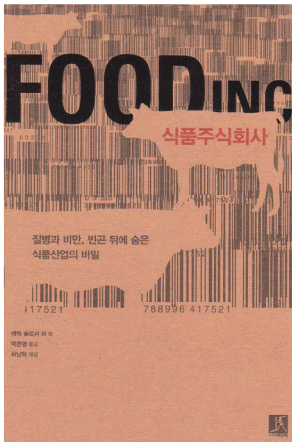
〈그림4〉 소비자 권리 강조하는 지경부 장관 발언만 소개한 중앙일보(2009년 9월 21일자 2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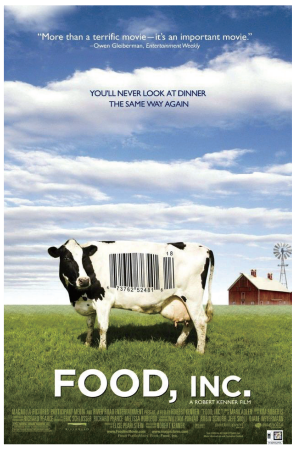
조중동의 SSM 관련 보도는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공격적이기까지 하다.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집단 이기주의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과 달리 중소상인들이 자신들의 몫을 지키기 위해 '떼'를 쓰고, 전통시장이라는 명분을 이용하고 있고, 소비자의 권리는 무시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이들의 시각이 반서민, 친대기업인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것은 이들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도 어기면서 일방적인 의견만 전달하여 여론을 편향되게 몰아간다는 점이다. 조중동의 주장대로 소비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면 이제 우리 언론소비자도 옥석을 고르는 권리행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약탈적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는 언론을 소비하는 것이 올바른 소비고, 윤리적 소비일 것이다. 더불어 지역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지역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는 지역 언론에도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다. 물론 지역 언론에도 옥석이 따로 있지만.

『식품주식회사』 함께 읽고, 함께 보고, 함께 실천합시다

엄은희 (부산대학교 HK교수)





온 나라가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라님들은 다른 이슈로 묻어 버리려 꽤나 노력 중이지만, 사건의 범위가 워낙 넓은데다 이제는 매몰지에서 오염물질 유출로 2차 재앙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 참상은 우리의 식탁도 그늘지게 만들고 있지요. 생협 조합원들은 항생제 없이 안전하게 키운 닭과 돼지와 소고기만 먹으니까 다행이라 눈 돌릴 수 있는 사안일까요? 이미 알려져 있듯, 구제역 바이러스는 공기로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안의 국립축산과학원마저도 삼사중의 방역망이 뚫려버렸고, 최근에는 휴전선 너머 이북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문까지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전하게 키운다 하더라도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이지요. 안전하고 청결하게 키워오던 생협공급 가축들도 같은 마을에 구제역 양성반응 농가가 나오면 함께 이름도 살벌한 살(殺)처분 명령이 내려진다잖아요.

며칠 전 딸이 물어왔습니다. "엄마, 살처분이 뭐야? 고기 살로 뭐하는 거야?" TV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화면은 본 적이 없지만 어디서 들은 소리가 있나 봅니다. 한 5초쯤 망설이다 대답 했습니다. 살처분의 살(殺)은 죽이는 것이라고. 병에 걸린 돼지와 소뿐 아니라 그 집에 같이 살던 다른 짐승들도, 아니 옆집의 짐승들까지 함께 땅 속에 꽁꽁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우리나라에 살던 돼지들-물론 언젠가는 지난 주 우리가 먹은 삼겹살이 되기 위해 죽었겠지만-중 1/3이 그렇게 죽고 있다고. 아이렇게 도시에서 산다는 걸 핑계로 아이의 눈을 가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이 땅의 아이들

마저도 공공연하게 알 듯, 식품위기란 게 먼 곳의 문제가 아닌 바로 며칠 전 먹은 우리 식탁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먹을거리 위기가 일상을 넘어 만성화되고 토착화되는 상황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겠지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들의 나라 미국은 사실 이런 문제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 책의 서문을 쓴 칼 웨버라는 사람도 고백하는 사실이지요. 미국식 식품 시스템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따라서 이 책이 밝히고자 하는 "질병과 비만, 빈곤 뒤에 숨은 식품산업의 비밀"은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이자, 바로 오늘 우리 식탁 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기 1년 전 이미 동명의 영화 《**Food**,Inc》(2008)로 제작된 바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영화가 제작된 배경에 대한 일종의 코멘터리 격의 책이지만, 영화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연결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 소개 지면이니 책 내용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이 책은 총 3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영화의 후일담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영화의 공동제작자이자 『패스트 푸드의 제국』의 저자인 에릭 슐로서(1장)와 영화의 감독인 로버트 케너의 이야기(2장)가 담겨있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가 다뤘던 주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정리하거나 영화가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다룬 유전자변형 작물의 위험성(4장), 값싼 식품을 만들기 위해 착취당하는 농민과 대부분 불법 이주민인 농업 노동자들의 이야기(7장)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도 하지만, '기후변화와 농업'(6장)이나 '가난한 나라의 식량위기와의 관계성'(8장), 혹은 우리에겐 아직 낯설지만 '에탄올 자동차 연료'(5장) 이야기처럼 책을 통해 새롭게 다룬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란 제목 하에 식품의 생산과 배분, 소비를 통해 현재의 식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땐, 동명의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94분의 영상이 책보다 훨씬 설득력 있지 싶었고, 혹여 영화의 유명세에 기대어 책을 팔려는 꼼수는 아닐까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분명 영화와 다른 시사점을 갖추고 있고, 충분히 독립된 존재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영화도 좋지만 이 책만이 줄 수 있는 장점을 몇 가지 찾아볼까요?

우선 영화에 비해 책은 훨씬 희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2장에는 영화의 감독인 로버트 케너가 들려주는 영화 제작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있습니다. 감독은 영화 《**Food**,Inc》의 출발이 식품에 관한 영화를 만들려는 소박한 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이 인터뷰를 신청하는 기업이나 농장주들마다 석연찮은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하네요. 풀을 먹어야 하는 소에게 억지로 먹인 옥수수 사료가 원인이 된 E-콜라이 대장균으로 희생된 아들 케빈을 위해 식품안전 운동의 최전선에 있던 바바라는 자기 가족의 현재 식단조차 말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고소당했을 거예요." 이게 오프라 윈프라까지도 기나긴 송사에 맞닥뜨리게 한 <식품비방금지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제어되지 않는 기업 권력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로 인해 식품에 대해 말할 자유마저 억압받는 미국사회를 그린 대단히 사회비판적인 영화가 된 것이지요. 《식코(Sicko)》가 그러하듯 이 영화를 본 후에 어느 정도 갑갑함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의 다른 장들에선 더 깊이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실천들을 제안하며 희망을 찾아보자고, 영화를 넘어선 식품산업의 구조와 그에 대한 대안 찾기를 시도하는 것이지요.

희망의 손길을 좀 더 느끼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9장의 마이클 폴란의 솔직한 제안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폴란의 글은 먹고 사는 일에 대해 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엄청나게 우려하면서도, 지구 곳곳에서 함께 숨 쉬고 있는 '나의 사악한 쌍둥이들'(풍요와 소비로 자아를 실현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인들)로 인해 기운 빠져있는 당신, 혹은 그들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이유를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고 있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우리의 낭패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하려고 하면 그게 뭐든 너무 미미하고 벌써 늦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폴란은 마치 21세기 다시 살아난 스피노자처럼 "여러분 자신의 먹을거리를 아주 조금이라도 길러보세요. 잔디밭 대신 채소 텃밭을 가꿔 봐요. 바로 당신이 먼저 바꿀 수 있습니다"고 제안합니다.

폴란의 이야기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요? 땅 넓은 미국에서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 이야기'라는 코너를 모든 장마다 붙여놓고, 한국의 상황과 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식품에 대해 깊은 식견을 갖춘 한국의 젊은 연구자 허남혁 선생이 짧지만 알찬 정보들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화《**Food**,Inc》는 저서『식품 주식회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동명의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 관련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을 조직하는 하나의 운동단체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http://www.foodincmovie.com/index.php)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혼자서 빨리 봐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여럿이 몇 주에 걸쳐 주제별로 깊이 있게 토론하고 공부하며 함께 보면 더 좋겠습니다. 동명의 다큐멘터리《**Food**,Inc》를 함께 보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지요. 그렇게 함께 읽고, 함께 보고, 함께 실천하면서 이제 희망을 만드는 일은 생협의 윤소맘들이 앞장서서 꽃피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UN, 협동조합의 해 슬로건 발표: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협동조합'

UN은 2012년 협동조합의 해를 위한 공식 슬로건으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협동조합(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을 승인했다. 찰스 골드 ICA 사무총장은 2010년 12월 3일 성명서에서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사회적 발전, 경제적 발전의 양 측면이 이 슬로건 안에 모두 압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의 해를 위한 공식 로고 또한 최종 승인 단계에 있으며 곧 발표될 예정이다.

찰스 골드 사무총장은 이 슬로건을 통해 2012년 협동조합의 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특히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협동조합의 가치와 일치한다고 느끼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A는 협동조합에 관한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이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협동조합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법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UN은 2011년 10월 31일 뉴욕 본부에서 열리는 UN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협동조합의 해 출발을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ICA는 UN의 공식선언 시기에 맞춰 일련의 회의와 보도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협동조합 진영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ICA총회에서 2012년의 출발을 함께 알리게 될 것이다.(2011년 11월 14~18일)

ICA의 우선 실천사항은 2012년 1년 간 ICA 회원들의 마케팅, 정보전달 매체, 상품 포장재, POP광고, 뉴스레터, 기관지, 연차보고서 그리고 웹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통 메시지를 폭넓게 전달하는 것이다. 골드 사무총장은 ICA회원들이 2011년에 필요한 다양한 준비 활동, 그리고 2012년의 실천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 인도 총리, ICA엑스포의 '성공'을 선언하다.

ICA 엑스포가 지난 2010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인도의 전원도시 방갈로아에서 열렸다. 엑스포에 참석한 고우다(Deve Gowda) 전 인도총리는 인도 독립 후 첫 번째 수상이었던 자와할랄 네루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여 엑스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했다. "나는 협동조합이 우리의 농업, 산업 더 나아가 국가적/국제적 생활양식을 위한 필수 기구라고 생각한다."

이번 엑스포는 ICA가 두 번째로 개최한 국제무역박람회로 IFFCO(인도농민비료협동조합)가 주최했다. 총 22개국 98개 조직이 참가하여 대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인도에서는 해마다 11월 14일부터 20일 동안 네루의 협동조합 사상을 기념하기 위해 협동조합 주간(Cooperative Week) 행사를 펼치고 있다. "네루 수상은 농촌 개발과 협동조합 운동 간의 시너지를 통해 굶주림과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고우다 씨는 전했다.

IFFCO의 협동조합발전 담당이사인 삭세나(Saxena) 박사는 "세계 협동조합의 무역박람회인 ICA엑스포는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이 115년 전에 창안해 낸 협동조합의 이상을 높이 평가한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는 100여개 협동조합이 이번 엑스포에 참가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고 밝혔다.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과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인 관계는 협동조합의 해로 예정된 2012년 차기 ICA엑스포 개최지를 영국 맨체스터시로 정하게 한 주요 요인이다. 제3회 ICA엑스포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영국 맨처스터시에서 영국 최대 생협인 코퍼라티브 그룹(Cooperative Group) 주최로 개최된다.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ICA 아프리카

레소토 국립대학의 렐로호놀로 모에티(Lehlohonolo Moeti) 박사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가 위기에 처한 농촌 구제를 위한 정책, 전략을 방치하여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협동조합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모에티 박사는 2010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레소토의 마세루(Maseru)에서 열린 제 9회 ICA아프리카 총회에서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위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는 협동조합에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기후변화는 아프리카 국가에게는 큰 위기를 의미한다. 그

러나 협동조합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출해 줄 수 있으며, 가뭄과 같은 재해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소액보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협동조합의 제 7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면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관련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맞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ICA의 2011, 2012년 일정>

2011년	
3월 2~3일	ICA-AP이사회, 광저우(중국)
5월 5~6일	ICA이사회,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30~31일	ICA유럽지역총회, '협동조합의 어제와 오늘'. 모스크바(러시아)
6월 28~29일	ICA주택위원회 심포지움, 이스탄불(터키) www.icahousing.coop
7월 28~29일	ICA 아프리카 협동조합각료회의, 빈트후크(나미비아)
8월 24~27일	ICA 조사위원회, '협동조합의 새로운 기회' 미켈리(핀란드) www.helsinki.fi/ruralia/ica2011
10월 26~28일	ICMIF(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정기모임(격년),도쿄(일본)ww.icmif.org
31일(변경가능)	2012년 국제협동조합의 해 공식 선언, UN 본부, 뉴욕(미국)
11월 1~2일	국제협동조합의 해 선언과 관련한 ICA활동, 뉴욕(미국)
14~18일	ICA총회, 칸쿤(멕시코)
2012년 UN 국제협동조합의 해: www.ica.coop/activities/iyc/index/html	
5월	ICA유럽지역총회
11월 25~30일	ICA-AP지역총회, 고베(일본)
미정	ICA미주지역총회
미정	ICA아프리카지역총회 및 제 10회 ICA아프리카각료회의,키갈리(르완다)
10월 31일~11월 2일	제3회 ICA엑스포, 맨체스터(영국)

(출처): ICA다이제스트 71호, 2011년 2월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iCOOP 자연드림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한 식품안전 운동이 자연스럽게 농업 지킴이로 이어졌으며, 농업 지킴은 곧 환경 지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비 기준을 바꾸는 활동과 사업, iCOOP생협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합니다.

조합원이 되는 방법

1. 매월 일정액의 조합비를 내고 생협 조합원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가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이 물품 유통마진이 거의 없이 이용하는 가격으로, 일반가에 비해 평균 20%가량 저렴합니다. (사)아이쿱(iCOOP)생협연대는 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회비(조합비)를 내는 대신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물류효율을 높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확대를 통해 생산자는 생산안정이 가능하게 한 우리 생협의 제도입니다.

전화가입 : 1577-0014
인터넷 가입 : http://www.icoop.or.kr로 접속하여 상단의 [조합원가입신청]을 누르시거나 http://www.icoop.or.kr/coopmall로 접속 후 이용안내 → [조합원 가입신청]을 누르세요.

2. 매월 조합비를 내지 않고 생협일반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협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물품을 보고 구입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생협물품에 익숙하지 못해 조합비를 내고 이용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합비를 내지 않고 일반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협물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터넷 주문과 가정에 직접 공급하는 물류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를 내고 이용하는 조합원께서 일시적으로 조합비를 낼 수 없을 경우 일반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쿱(iCOOP)생협은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아이쿱(iCOOP)생협 가입 및 상담 전화 : 1577-0014
자연드림 전국 매장 안내 : 1577-6009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12>
9 772093 987001
ISSN 2093-9876

CO-OPERATIVES JOURNAL Spring 2011

The Journal of the iCOOP KOREA Cooperative Institute

Toward cooperative production :

Critics and suggestions on the Korean Agro Policies in the era of WTO-FTA

Young-geun Gwon

The Korean agriculture in crisis and the challenges of co-ops

Eun-mi Jeong

An Consumer Co-operative's Solution coping with 'vegetable crisis' in 2010

Heon-Joong Heo

The reasons iCOOP thinks about agro-production issues

Sung-sik Sin

Round-table: Producer members open their mouths on the Korean farming conditions and the iCOOP production policies

iCOOP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TEL 02) 2060-1373 **FAX** 02) 2060-1374
E-Mail icoop-institute@hanmail.net
www.icoop.re.kr

재생종이로 만든 책